

2024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윤광일 이상신
임경훈 한정훈

제목

2024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

저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윤광일 이상신 임경훈 한정훈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발행일자

2025년 5월 9일

차례

발간사	4
주요 내용 요약	5
Ⅰ.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 인식 조사 소개	8
Ⅱ.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13
Ⅲ.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29
Ⅳ.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39
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44
Ⅵ. 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58
Ⅶ.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66
Ⅷ. 개헌에 대한 태도와 선호	71

발간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우리 민주주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여름에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2024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첫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수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일반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일반 시민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다를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이해가 해당 국가 민주주의 운영의 실체에 더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 모두의 인식과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매년 이 조사 사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 등을 보완, 개선하면서 우리 시민의 인식 양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질(quality)을 실질적으로 높일 개혁 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널리 공유하여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수행하는 이 조사 사업과 여타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책임교수 임 경 훈 올림

주요 내용 요약

1. 조사 설계 취지

- 총 설문 문항은 173개로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였고, 일반 유권자 개인의 평소 생각에 보다 근접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화나 웹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의 방식을 취하였음.
-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와 그에 대한 선호도 순위,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방식과 그 정도를 확인하려고 했고, 선거 등의 정치적 이벤트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 일반 시민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음.

2.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기대

- 우리 시민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는 점에 동의하고(83.3%)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인식(73.4%)하고 있으며. 인권도 존중(77.2%)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70.3% 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그러나 설문 문항을 달리하여 질문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압도적으로 꼽고 있음. 우리 유권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68.1%),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75.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줌.

3. 선거 경쟁, 자유와 평등, 공정성 등에 관한 인식

- 우리 유권자들은 대체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뇌물을 받는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가 26.8%, “부자들이 선거를 돈으로 매수한다”라는 설문에 동의한 응답자가 24.2%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매표 행위를 조금이라도 직접 경험했다는 비율은 8.8%, 그 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응답자도 13.3%에 이름.

- 우리 유권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 영역은 언론 자유, 법치, 사회적 공정성 등임. 언론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절반 정도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법치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대체로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 사법적 정의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시민들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4. 주요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

- 2024년 여름 기준, 우리 유권자들의 과반수는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개헌을 할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현행 선거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우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임.

5.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에 대한 지지 여부

- 우리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거나(25.2%),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올 수 있다고(20.3%) 생각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79.8%), 의회와 정당에 개입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거나(54.7%),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46%) 판단함. 설문 문항을 조금 달리하여 물어보면,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지지 경향이 관찰됨.
- 동시에 이번 조사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85.5%), "국민의 뜻과 의지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82.2%),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핵심적인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68.8%) 등의 진술에 대해 높은 긍정도를 보임.

6. 향후 조사 방향

- 국제 조사기관들이 민주주의 제도적 측면과 제도 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민주주의 지수들은 측정 기관에 따라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평가하거나, 해당 국가 시민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일부 혼란도 야기하고 있음. 대체로 일반 시민은 전문가에 비해 자국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해 더 회의적

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할 필요 있음.

- 우리 유권자들의 독재에 대한 선호는 낮지만, 잠재적으로 권위주의적 대안을 선호할 수도 있는 유권자들의 비율 증가는 포퓰리스트 스트롱맨 리더십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비율의 움직임을 추적 조사할 예정임.
- 우리 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양태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국제 비교를 세밀하게 할 필요 있음. 이러한 국제 비교 작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개선할 보다 설득력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후속 조사에서는 민주주의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고 각종 조사에서도 잘 포착이 안 되는 다양한 사회 소수 집단에 좀 더 접근할 필요 있음.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평가, 개헌 등 주요 정치개혁에 관한 선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추이를 관찰할 계획임.

1. 민주주의의 대한 일반 시민 인식 조사 소개

1. 연구 목적

■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 인식 조사(이하 민주주의 인식 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 (1) 한국 일반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와 이들이 평가하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파악하고,
- (2) 이를 기존의 일반 유권자 대상 정치·사회 인식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 (3)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운영 실태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처방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함.

■ 민주주의 클러스터 민주주의 인식 조사

- 본 조사는 기존 정치·사회 인식 조사와 달리 민주주의 인식과 평가 관련 설문에 특화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대상 연구와 달리 대표성 있는 일반 유권자 대상의 대면조사로서 차별성이 있음.
- 2024년 7월 처음 시행한 본조사는 향후 매해 1회 실시하여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함.

2. 코호트 분석

■ 2024년 민주주의 인식 조사의 코호트

- 2024년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분류법을 사용하였음. 코호트 분류는 기존 연구들을 문헌 조사하여 결정하였음.

<표 1-1> 민주주의 인식 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코호트	출생 연도	조사 빈도 (2024년 5월)	비율(%)
전쟁 세대	1950년 이전 출생	46	4.6
산업화 세대	1951년~1960년	170	17.0
386세대	1961년~1970년	228	22.7
X세대	1971년~1980년	179	17.9
IMF 세대	1981년~1990년	171	17.1
밀레니얼 세대	1991년~2000년	165	16.5
Z세대	2001년 이후 출생	44	4.4
합계		1,003	100.0

3. 조사 개요

<표 1-2> 2024년 7월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2024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 방법	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단위	총 1,003명
표본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 방법	대면 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2024년 7월 9일 ~ 8월 9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조사 결과 요약

■ 2024년 조사소개

- 2024년 민주주의 의식 조사는 아래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계했음.
 -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 민주주의 주요 5차원(선거, 참여, 자유, 평등, 속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현행 및 대안적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

■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 절차와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 인식
 -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중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 민주주의에 대해 절차와 가치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성과와 재분배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훨씬 많으며 (68.1%), 경제 불평등 축소와 정치적 자유 보장 중에서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이 더 높음(75.2%).
-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10점 만점, 평균(mean)=M)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김(M=8.84).
 -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임(M=6.43).
 - 현재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라는 평가(M=6.77)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약간 높음(M=6.49).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만족도와 평가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에 대한 압도적 선호와 비민주주의 통치 방법에 대한 높은 선호 혼재
 -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74.4%) 군대 통치 선호가 매우 낮음(11.2%). 그러나, 강한 지도자(54.7%)와 전문가 통치 선호(46.0%)도 높은 편임.

■ 민주주의 주요 차원: 선거

-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최소주의적 정의는 '자유롭고 공정한(free and fair) 선거'를 현대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sine qua non)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전문가 조사는 선거 제도와 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각국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 옴.
- 한국 유권자 또한 자유로운 선거를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음.
-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근의 선관위 공정성 논란이 있지만, 2024년 여름 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개표 공정”(88%)과 “선관위 공정”(77.4%)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민주주의 주요 차원: 참여

-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 전 최대한 숙의”를 선호
 - 투표 참여 후 다수 의견에 승복한다는 비율이 반수를 넘어 가장 높음.
 -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보건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과정에 대체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나 기초 자치단체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시민단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함.

■ 민주주의 주요 차원: 자유

- 법원의 정부 견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드러남.
- 젊은 세대일수록 법의 보호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전체 응답자의 27.5%가 한국에서 정치적 고문이 존재한다고 답함.
- 행정부의 헌법 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감 및 행정부 권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현재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 시민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함.

■ 민주주의 주요 차원: 평등

-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국제지표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 이러한 국제지표의 부정적인 평가와 대조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여성의 공직 기회가 낮지 않다고 보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 배분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높음.
- 한국 사회에서 권력 배분이 언어, 민족, 종교, 문화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

■ 민주주의 주요 차원: 속의

-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발견됨.
- 전체 응답자의 58.2%가 한국의 공론장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하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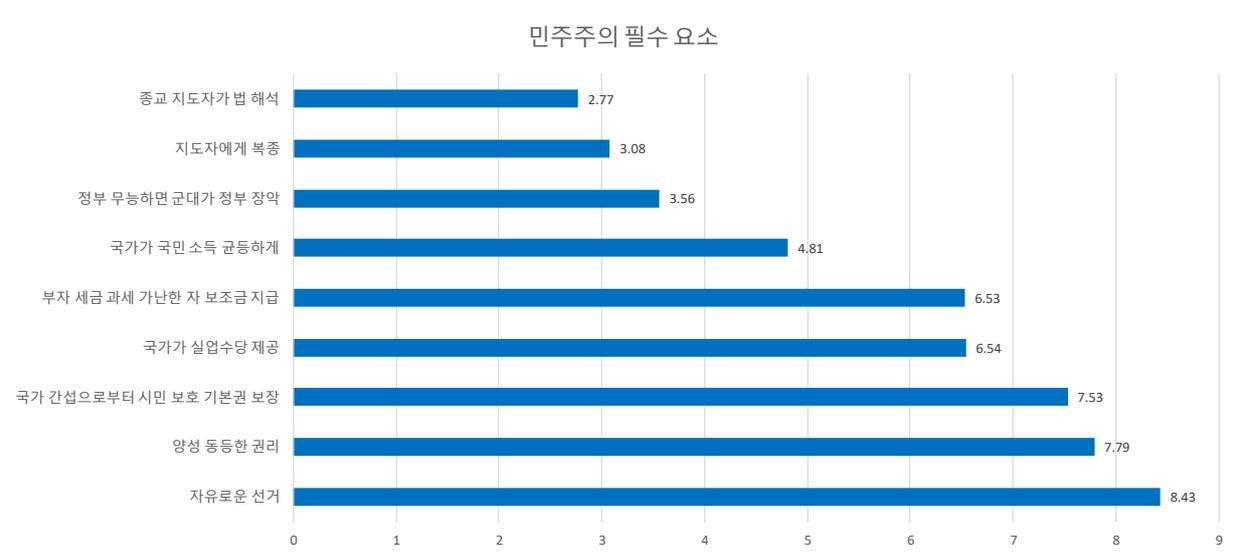
■ 개헌에 대한 태도와 선호

- 개헌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과반이지만 필요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음.
-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높은 선호가 드러남.
- 현행 선거 제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유지 선호가 가장 높음.

II.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1. 민주주의 필수 요소 지지 순위

<그림 II-1> 민주주의 필수 요소



■ 조사 문항

- “민주주의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요소들이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0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뜻하고 10은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 1)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종교 지도자가 법을 해석한다. 3)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한다. 4) 국가가 실업수당을 제공한다. 5) 정부가 무능하면 군대가 정부를 장악한다. 6)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 7) 국가는 국민들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든다. 8)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한다. 9)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 위 9개 진술에 대해 평균(M)을 구하여 그래프를 그림.
 - 이 문항은 World Values Survey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용함.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음.

- 제시한 민주주의 필수 요소 9개 중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M=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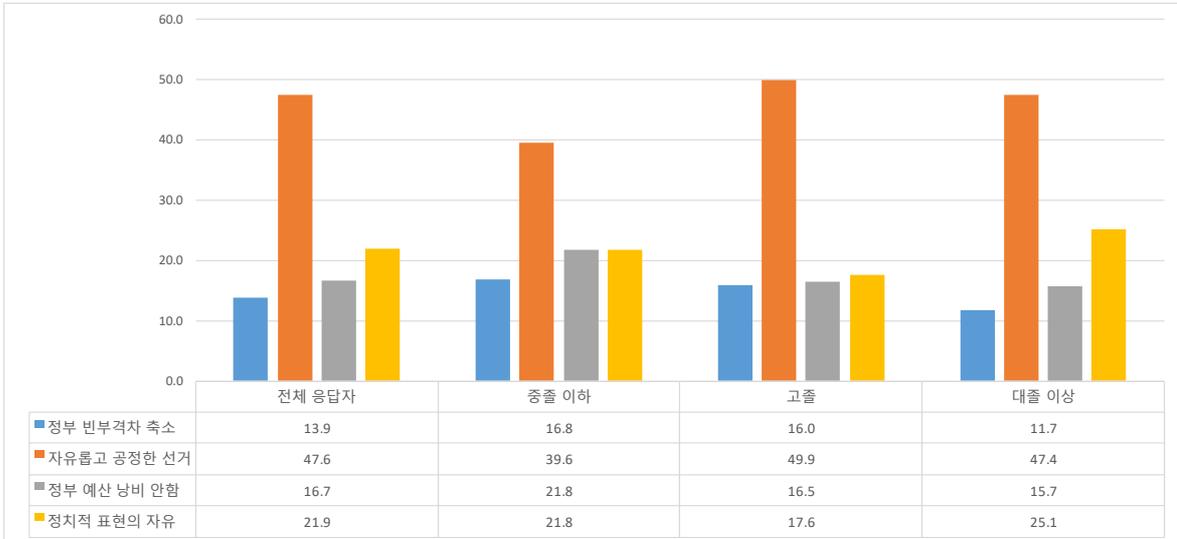
- 그다음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M=7.79)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보장”(M=7.53) 순으로 지지 정도 강함.
 - 선거와 기본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소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남.
 - OECD 국가 중 양성평등 수준이 지속해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표출된 것일 수 있음. 이 진술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음.
- “국가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M=6.54)과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M=6.53)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음.
 - 사회경제 차원에서 성과(performance)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사회권 보장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민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M=4.81)으로 보는 만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임.
- “종교 지도자가 법을 해석”(M=2.77), “지도자들에게 복종”(M=3.08), “정부가 무능하면 군대가 정부를 장악”(M=3.56) 등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상황을 민주주의의 필요 요소로 인식하는 데에 뚜렷하게 반대하고 있음.
- 지지 정당이나 이념에 따른 민주주의 필수 요소 중요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자유로운 선거, 양성 동등한 권리, 국가 간섭으로부터 시민 보호 기본권 보장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국가가 실업수당 제공, 정부의 부자 과세 및 빈자 보조금 지급은 집단에 따라 지지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그 평균 차이가 크지 않음.
 - 종교 지도자 법 해석, 지도자에게 복종, 정부가 무능하면 군대의 정부 장악 등 반민주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도 비슷한 강도로 반대하고 있음.

2. 민주주의 필수 요소

■ 조사 문항

- “다음의 진술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귀하는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4개의 선택지로 구성된 다음 4개의 세트로 측정함. 이는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 핵심 요소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달리 제시된 핵심 요소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1) ①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인다. ②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 지도자들을 뽑는다. ③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④ 국민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2) ①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한다. ②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요소가 모두에게 제공된다. ③ 국민이 정치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④ 정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① 정부가 법과 질서를 보장한다. ② 언론매체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③ 정부가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한다. ④ 복수의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4) ① 국민이 항의와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갖는다. ② 정치가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다. ③ 법원이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한다. ④ 실업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 이하에서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성, 세대(전쟁, 산업, 386, X, 밀레니얼, Z), 가구 소득(상, 중, 하), 교육 수준(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지지 정당(지지 정당 없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 이념(진보, 중도, 보수)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그림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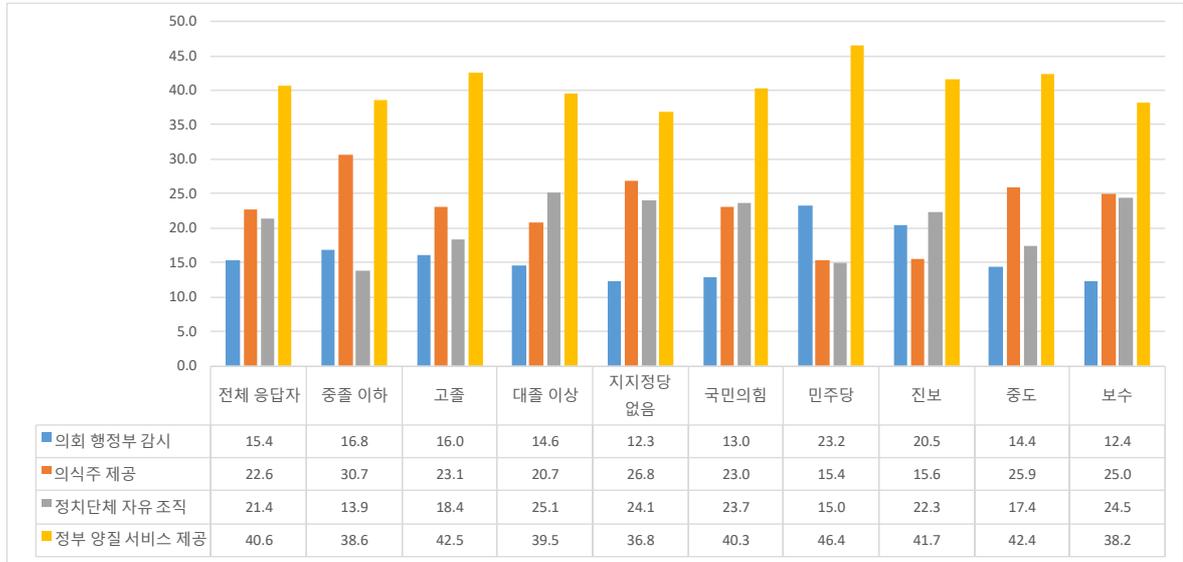
<그림 II-2> 민주주의 필수 요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

-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의 빈부격차 축소”(13.9%)와 “정부 예산 낭비 안 함”(16.7%)과 같은 성과 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47.6%)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21.9%)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을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핵심 요소로 꼽는 비율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로운 선거” 개별 필수 요소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보임.
- 성과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꼽는 경향이 고졸이나 대졸 이상 계층보다 중졸 이하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최소주의적, 특히 선거 중심의 접근에 치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임. 추후 조사에서 소외 계층의 민주주의 이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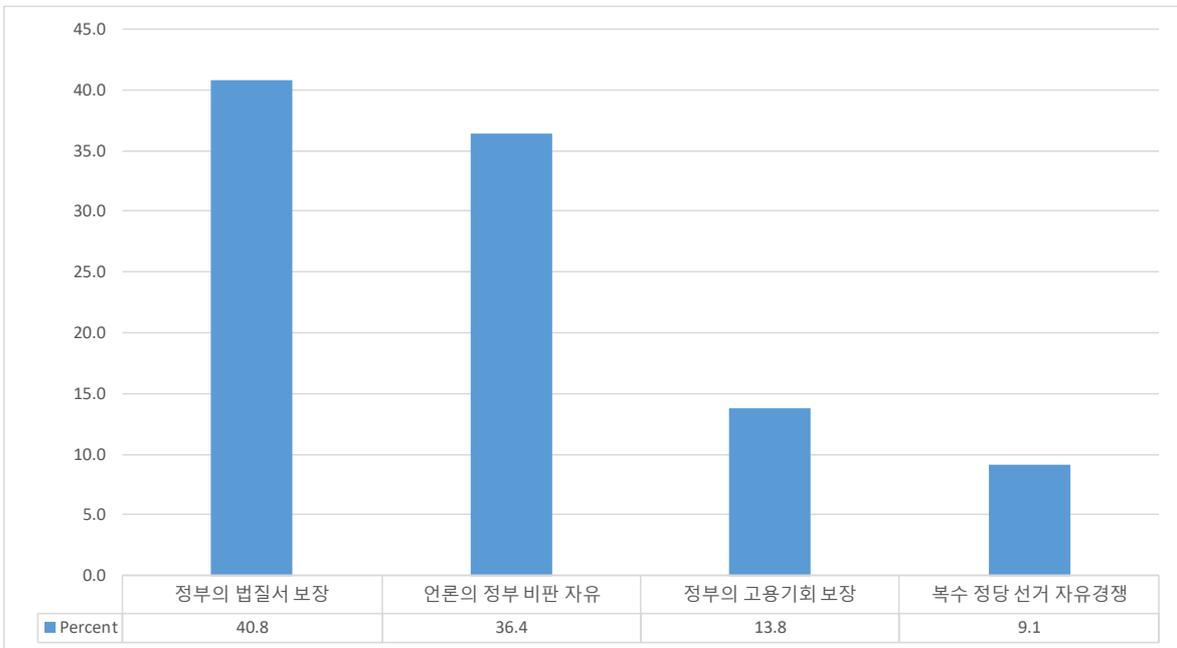
<그림 II-3> 민주주의 필수 요소: 정부의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



■ 정부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40.6%)하는 것과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요소가 모두에게 제공”(22.6%)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정치단체를 자유롭게 조직”(21.4%)이나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15.4%)와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보다 더 중요한 필수 요소로 보고 있음.
- 일반 유권자는 정치적 기본권 중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두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최소주의적, 제도적 민주주의 정의에서 중요한 결사의 자유나 권력분립 등은 성과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정부의 양질 서비스 제공 차원을 중심으로 고졸, 민주당 지지, 중도와 진보층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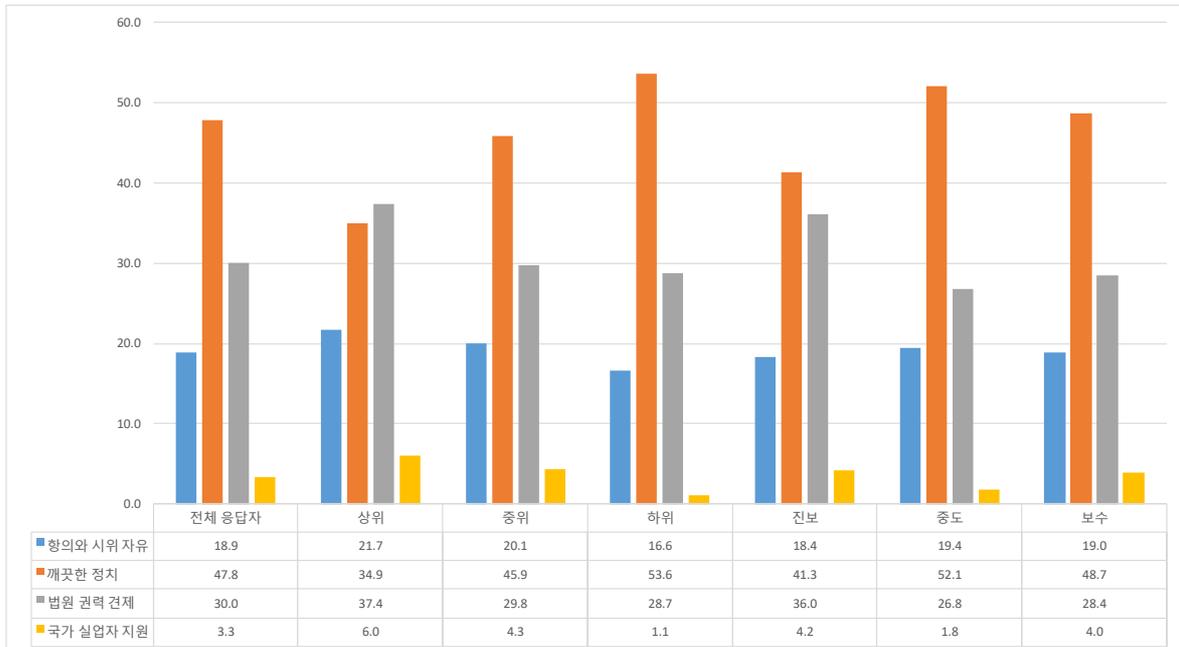
<그림 II-4> 민주주의 필수 요소: 정부의 법과 질서 보장과 언론의 정부 비판 자유



■ 정부의 법질서 보장과 언론의 정부 비판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 “정부가 법과 질서를 보장”(40.8%)하는 것과 “언론매체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36.4%)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13.8%)하거나 “복수의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9.1%)하는 것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필수 요소로서 법치와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복수 정당의 선거 경쟁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성과 차원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권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선택지에서는 사회경제 배경 변수나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음.

<그림 II-5> 민주주의 필수 요소: 깨끗한 정치와 법원의 권력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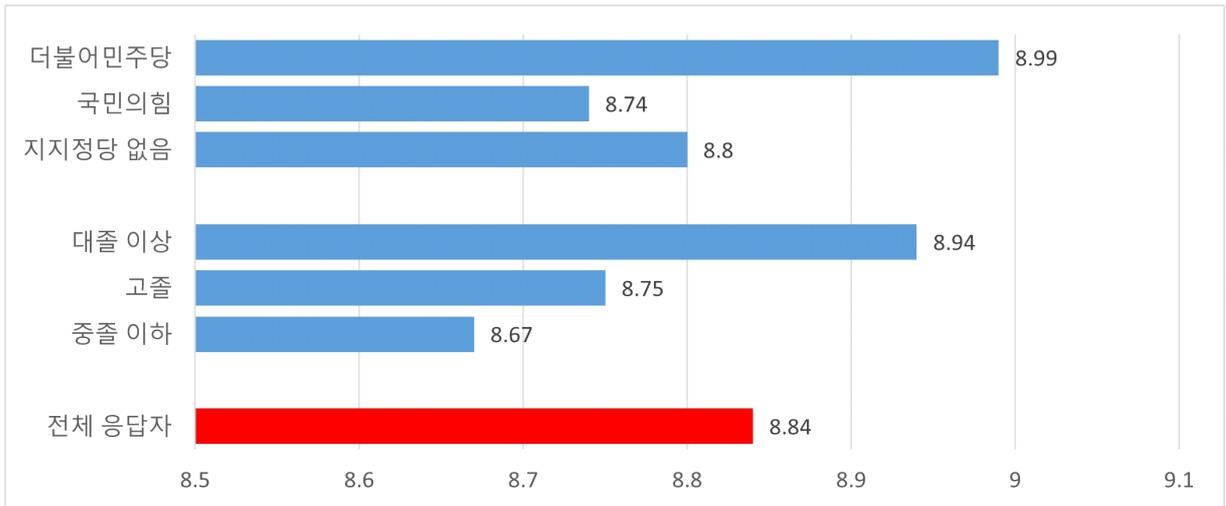


■ 정부의 법질서 보장과 언론의 정부 비판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 전체 응답자 차원에서는 “정치가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다”(47.8%)와 “법원이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한다”(30.0%)는 것이 “국민이 항의와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갖는다”(18.9%)와 “실업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3.3%)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깨끗한 정치에 대한 높은 지지는 유교적·도덕적인 정치관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음.
- 법원의 권력 견제를 통한 국민 보호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치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함께 정부 기관 중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국가의 실업자 지원이 매우 낮은 지지를 받은 것 또한 사회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역할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
- 깨끗한 정치에 대한 지지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계층과 중도와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법원의 권력 견제는 상위 계층과 진보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3.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선호

<그림 II-6> 민주주의 국가 거주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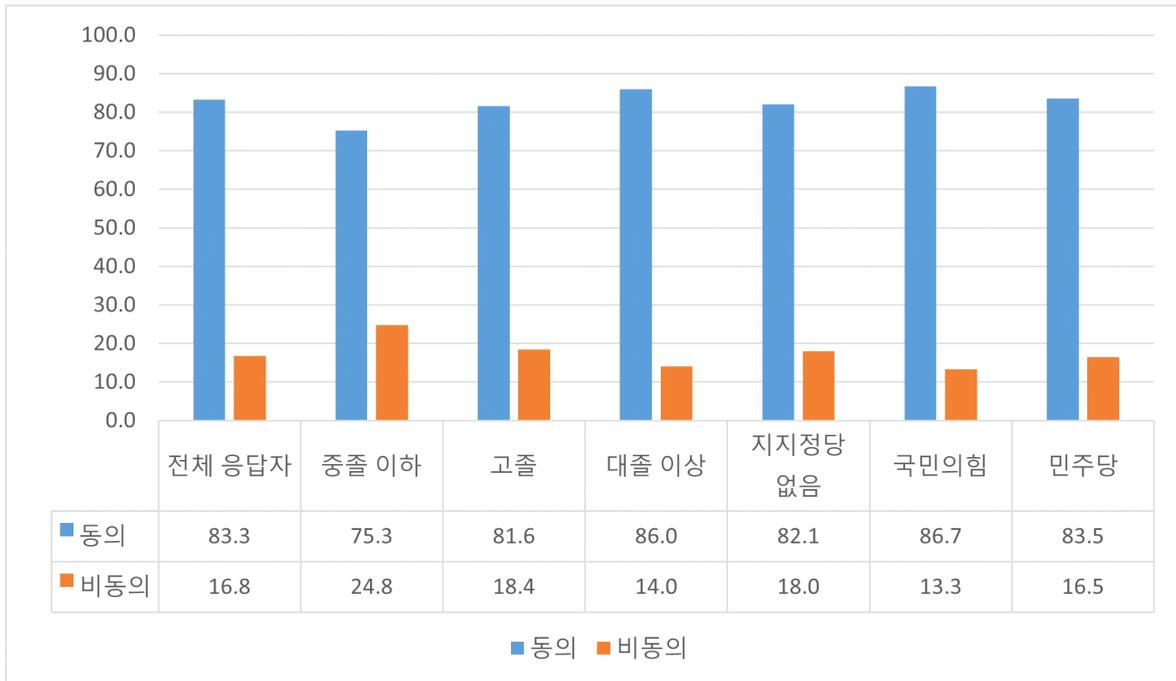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민주주의 국가 거주 중요도)를 11점 척도(5점 보통) 4개의 설문으로 민주주의 선호도와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하게 했음.
- 위 그래프에는 이 문항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하였음. 평균값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응답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 추상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선호

- 전체 응답자의 민주주의 선호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M=8.84). 성별, 세대, 학력, 지지 정당, 정치 이념 등에 따른 모든 집단 구분에서도 민주주의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아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인 만큼,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선호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나 정책 지향에 대한 인식과 다른 통치 체제와의 상대적 평가와 함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
- 대졸(M=8.94)과 고졸(M=8.75) 집단과 민주당(M=8.99)과 국민의힘(M=8.74) 지지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남.

<그림 II-7> 민주주의 선호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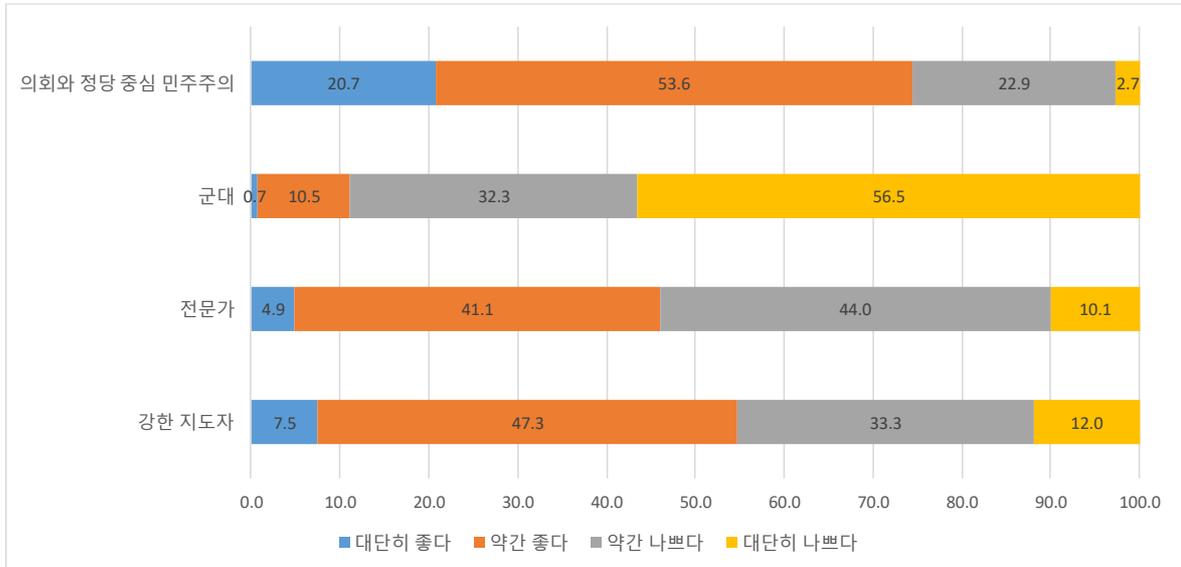
-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좋은 정부형태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 응답을 합산하여 “동의”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산하여 “비동의”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추상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압도적 선호 재확인

- 같은 취지의 앞선 문항(‘민주주의 국가 거주 중요’)보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과 같이 부정적 답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음에도 민주주의 정부형태에 대한 압도적 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학력일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동의 비율(8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학력에 따른 차이는 ‘민주주의 국가 거주 중요’ 문항에서와 같은 결과이지만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다르게 나타남.

4.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선호

<그림 II-8> 우리나라 통치 방법에 대한 상대적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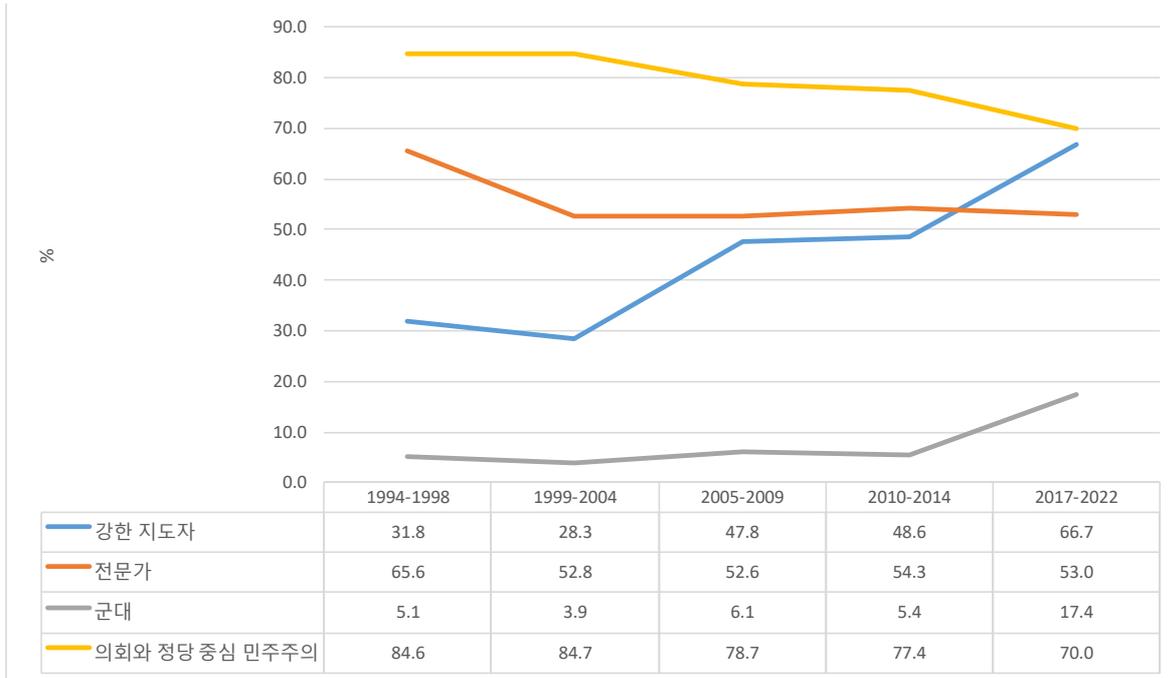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으로써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의회와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강한 지도자); 2) 정부가 아닌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한다(전문가); 3) 군대가 정부를 지배한다(군대); 4)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 통치한다(의회와 정당 중심 민주주의) 등 4개 진술을 상자 안에 배치하여 개별 통치 방법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되 상대적 평가도 가능하게 함.
 - 1=대단히 좋다; 2=약간 좋다; 3=약간 나쁘다; 4=대단히 나쁘다.
 - 각 통치 방법에 대한 선호를 누적 가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함.

■ 민주주의에 대한 압도적 선호와 비민주주의 통치 방법에 대한 높은 선호 혼재

-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74.4%) 군대 통치 선호가 매우 낮음(11.2%).
- 그러나 강한 지도자(54.7%)와 전문가 통치 선호(46.0%)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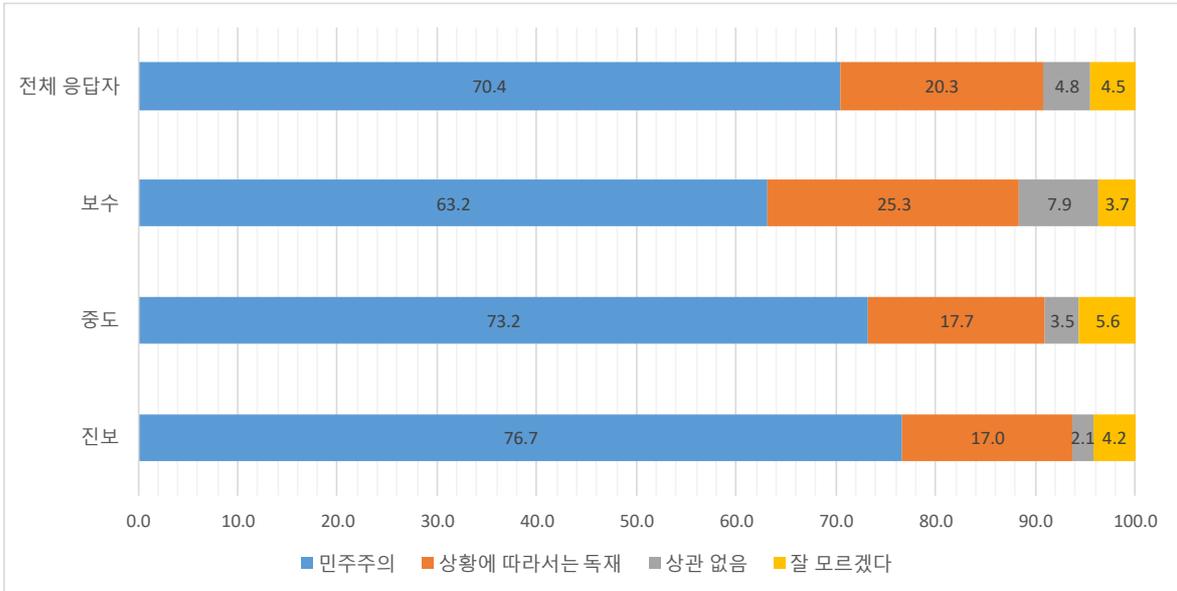
<그림 II-9> 민주주의 상대적 선호: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Wave 3 (1994-1998) ~ Wave 7(2017-2022)



■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 비교

- 본 민주주의 인식 조사는 첫 조사로 통치 방법 선호의 추세를 파악할 수 없으나 본 문항의 출처인 세계 가치관 조사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음.
 - 최근 조사인 7차 조사에서는 본 조사보다 강한 지도자 선호(66.7%)가 12.0%P 높게 나타났고, 민주주의 선호(70.0%)는 4.4%P 낮게 나타났음.
 - 민주주의 선호 하락세와 강한 지도자 선호 상승세가 눈에 띄며, 전문가 선호도 다소 낮아졌으나 과반임.
 - 권위주의 통치의 전형적인 방식인 군대 통치 선호가 10% 미만의 낮은 추세였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17.4%로 본 인식 조사보다 6.2%P 높게 나타났음.
- 두 조사 간 통치 방법 선호 순위가 같고, 각 방법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강한 지도자 경우를 제외하면 그리 크지 않아 본 조사의 문항 신뢰도(reliability)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임.

<그림 II-10> 민주주의 vs. 상황에 따른 독재 상대적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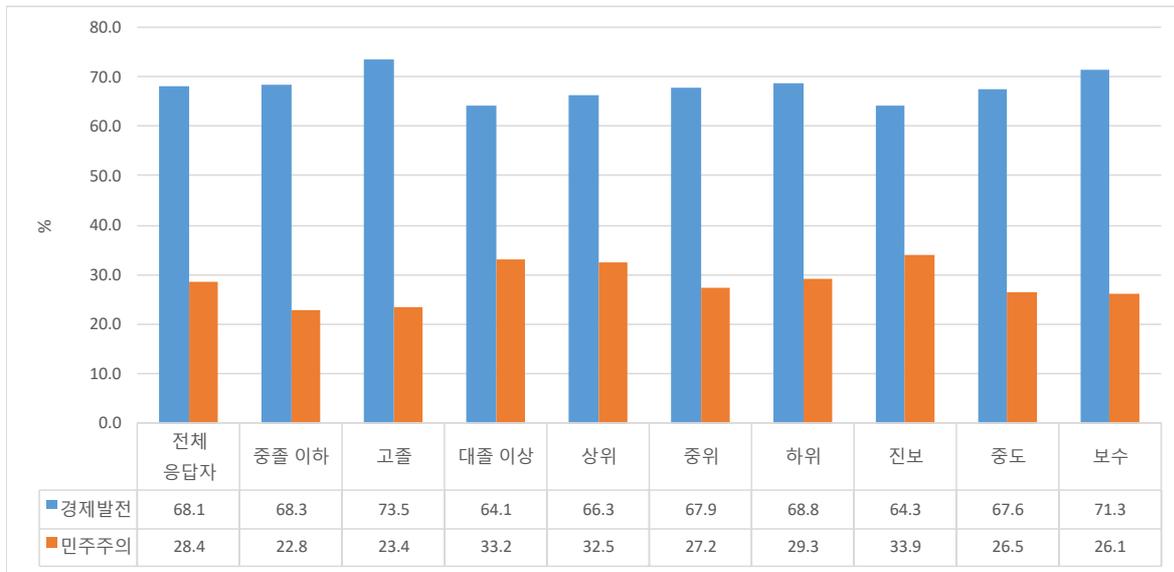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다음 견해 중 귀하의 생각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 항상 더 낫다; 2=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 3=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 4=잘 모르겠다.
 -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누적 가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함.

■ 상황에 따른 독재보다 민주주의 선호가 압도적임

- 통치 체제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과 같은 용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더라도 독재 선호가 현저히 떨어짐.
- 이념 성향에 따른 선호 차이가 드러남. 보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25.3%)나 “두 체제 모두 상관없다”(7.9%)는 비율이 중도나 진보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보수층도 민주주의의 상대적 선호(63.2%)가 반수를 훨씬 초과하여 이념에 따른 선호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임.

<그림 II-11>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상대적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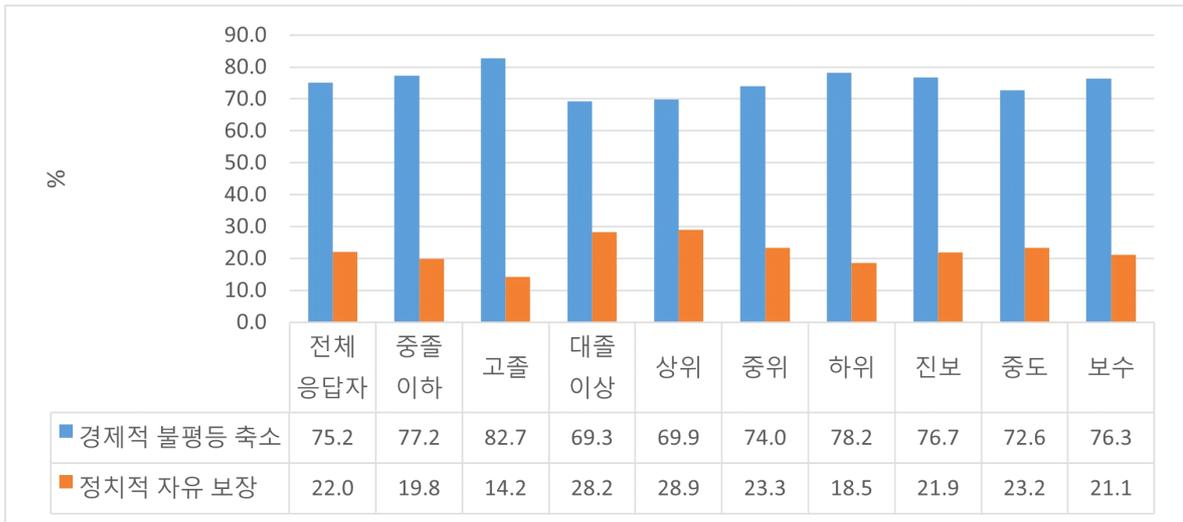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경제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2=경제발전이 좀 더 중요하다; 3=민주주의가 좀 더 중요하다; 4=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5=잘 모르겠다
 - 1과 2를 합산하여 “경제발전”으로, 3과 4를 합산하여 “민주주의”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경제발전 선호의 상대적 우위

- 전체적으로 “민주주의”(28.4%)보다 “경제발전”(68.1%)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소득, 학력, 정치 이념에 따른 상대적 선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저소득층 일수록, 고졸 학력층에서, 보수층에서 경제발전의 상대적 선호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그림 II-12> 경제적 불평등 축소 vs. 정치적 자유 보장의 상대적 선호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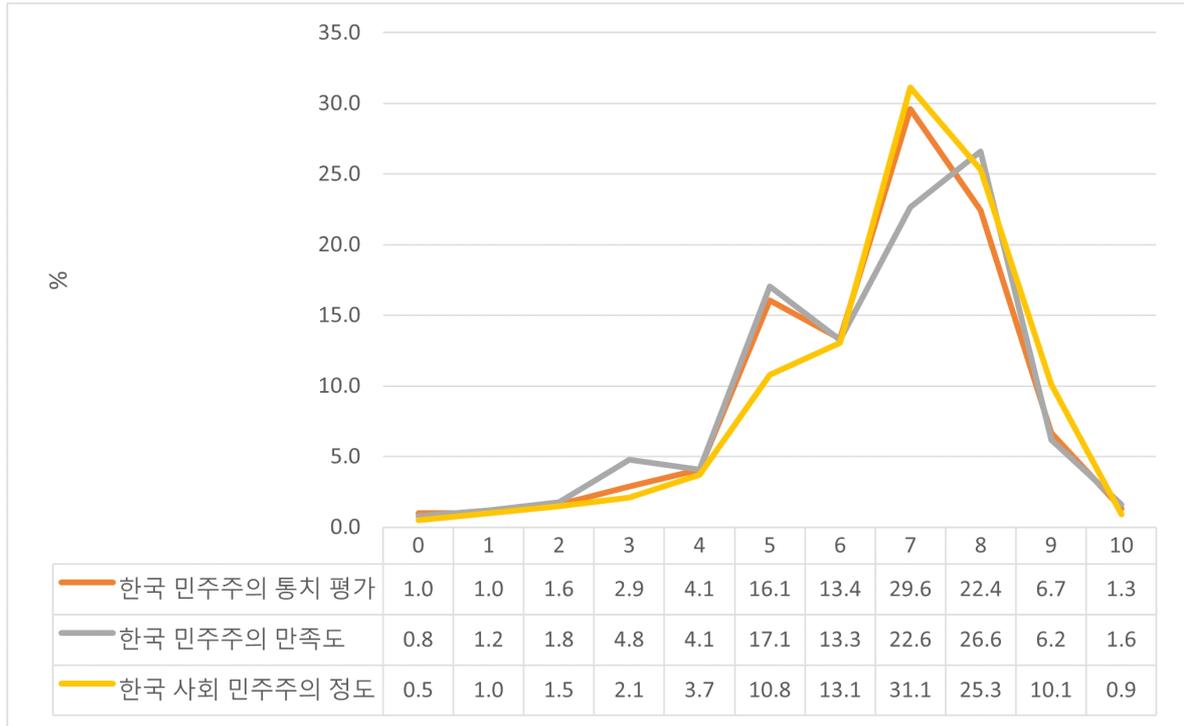
-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3=정치적 자유 보장이 좀 더 중요하다; 4=정치적 자유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5=잘 모르겠다.
 - 1과 2를 합산하여 “경제적 불평등 축소”로, 3과 4를 합산하여 “정치적 자유 보장”으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경제적 불평등 축소 선호의 상대적 우위

-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축소”(75.2%)의 상대적 선호가 “정치적 자유 보장”(22.0%)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앞선 경제발전 대 민주주의 상대적 선호 문항 결과와 일관되게 경제적 성과를 민주주의와 그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고졸 계층에서 “경제적 불평등 축소”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게 나타남.
 - 하위 계층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민감한 선호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들이 보수 정당, 특히 신자유주의 또는 경제적 보수 세력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임.

5. 한국 민주주의 평가

<그림 II-13> 한국 민주주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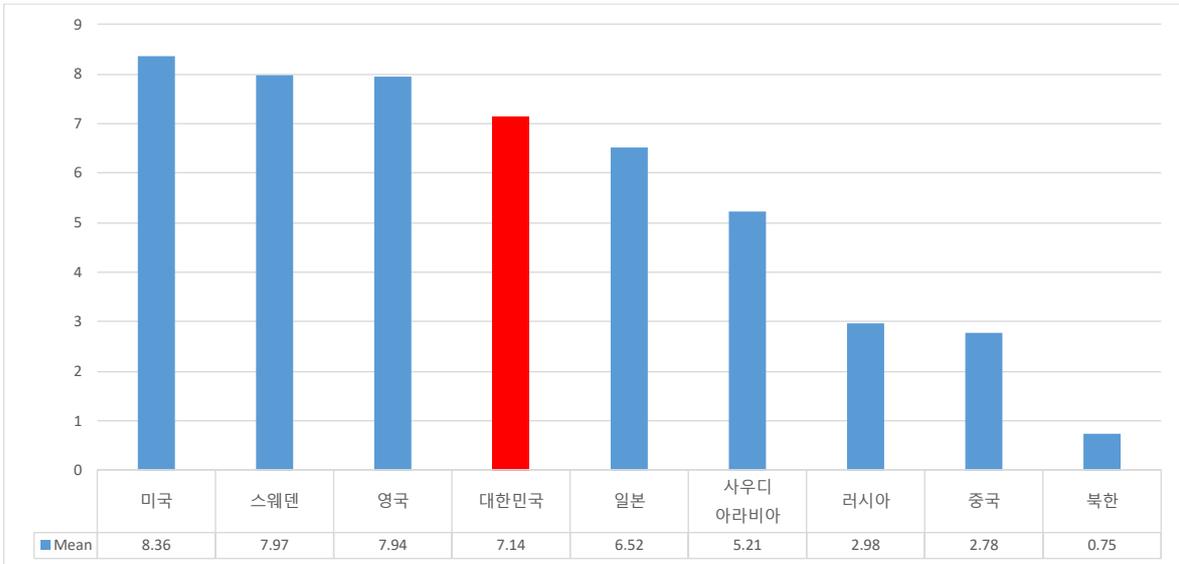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한국 민주주의 통치 평가),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한국 민주주의 만족도), “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가 0 점, ‘매우 민주적이다’가 10점입니다”(한국 사회 민주주의 정도) 등 11점 척도(5점 보통) 3개의 설문으로 한국 민주주의 실태를 평가하게 했음.

■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현재 “한국 민주주의 통치 평가”,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 정도” 등 3개 설문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드러남.
-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M=6.43)이며,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라는 평가(M=6.77)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약간 높은 것(M=6.49)으로 나타남.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만족도와 평가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14>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 평가 순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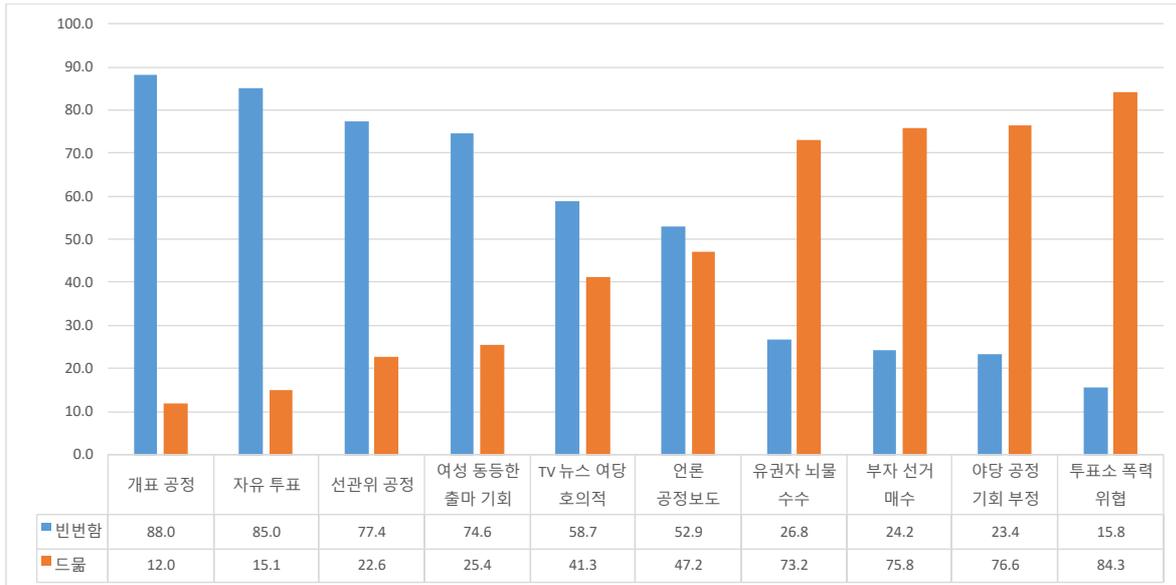
- “①이 완전한 독재, ⑩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나타낸다고 할 때, 귀하는 다음 나라가 현재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⑤는 보통)
 -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웨덴, 대한민국 순으로 11점 척도로 평가하게 함.

■ 민주주의 국가 중 비교적 긍정적 평가

- 전문가 조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로 보임.
 - 2023년 V-Dem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민주주의 국가임.
 - 본 조사에서 미국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V-Dem 조사에서 북한과 함께 최하권으로 평가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교적 높은 순위는 민주주의 또는 독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전문가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III.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림 III -1> 선거 과정 및 관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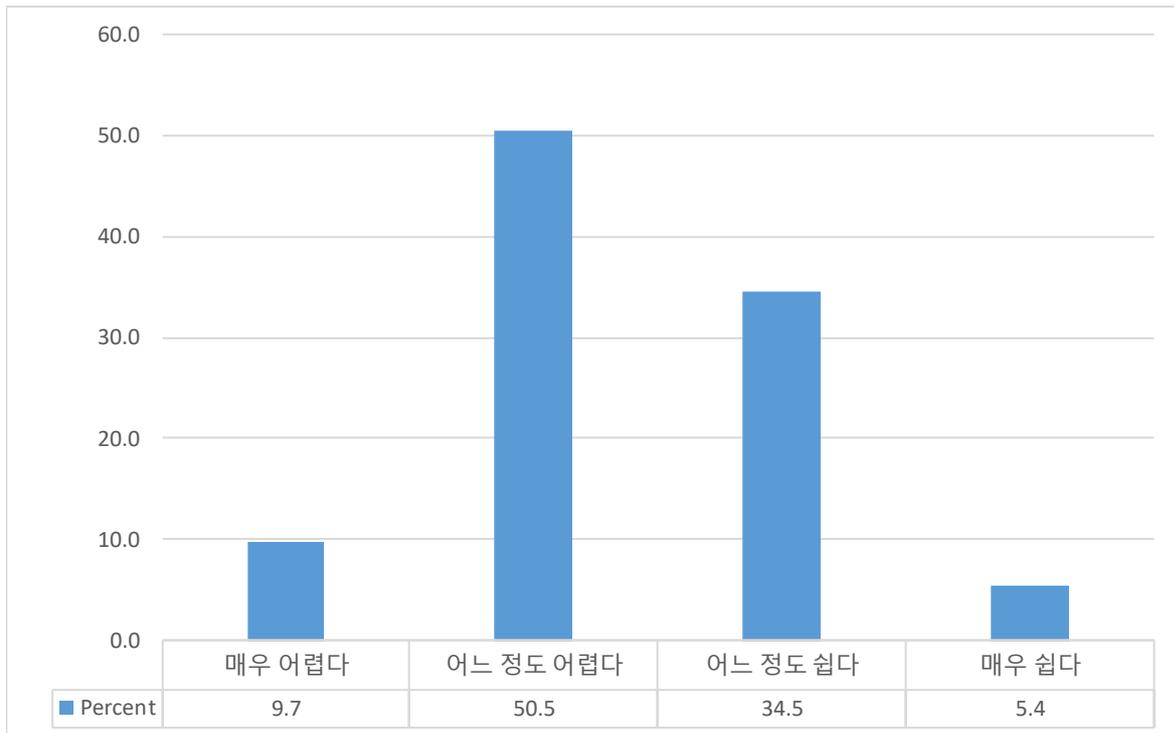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얼마나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개표는 공정하다(개표 공정).
 - 2) 야당 후보는 선거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야당 공정한 기회 부정).
 - 3) TV 뉴스는 여당에 호의적이다(TV 뉴스 여당 호의적).
 - 4) 유권자들은 뇌물을 받는다(유권자 뇌물 수수).
 - 5)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한다(언론 공정보도).
 - 6)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정하다(선관위 공정).
 - 7) 부자들이 선거를 돈으로 매수한다(부자 선거 매수).
 - 8)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폭력으로 위협 당한다(투표소 폭력 위협).
 - 9)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자유 투표).
 - 10) 여성들은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여성 동등한 출마 기회).
 - 1=매우 자주 일어난다; 2=자주 일어난다; 3=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1과 2는 합산하여 “빈번함”으로, 3과 4는 합산하여 “드물”으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대체로 긍정적인 선거 과정 및 관리 평가

-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근의 선관위 공정성 논란이 있지만, 2024년 여름 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개표 공정”(88%)과 “선관위 공정”(77.4%)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유권자 뇌물 수수”, “부자 선거 매수”, “투표소 폭력 위험” 등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함.
- “야당 공정한 기회 부정”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76.6%)은 야당 후보가 대체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림 Ⅲ-2>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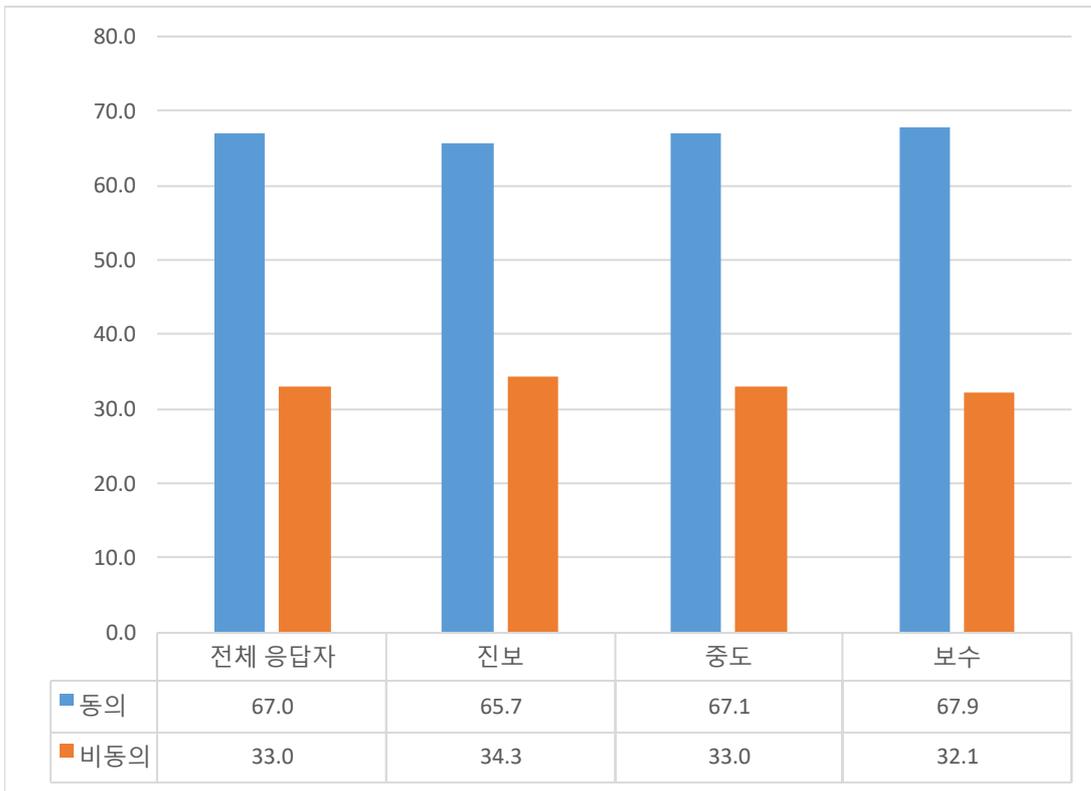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어렵다; 2=어느 정도 어렵다; 3=어느 정도 쉽다; 4=매우 쉽다.

■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다소 어렵다고 평가

- “어느 정도 어렵다”(50.5%)와 “매우 어렵다”(9.7%)를 합하면 60.2%에 달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다소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양질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정권 교체 용이함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정치 성향과 사회경제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그림 Ⅲ-3> 선거만이 정부 문책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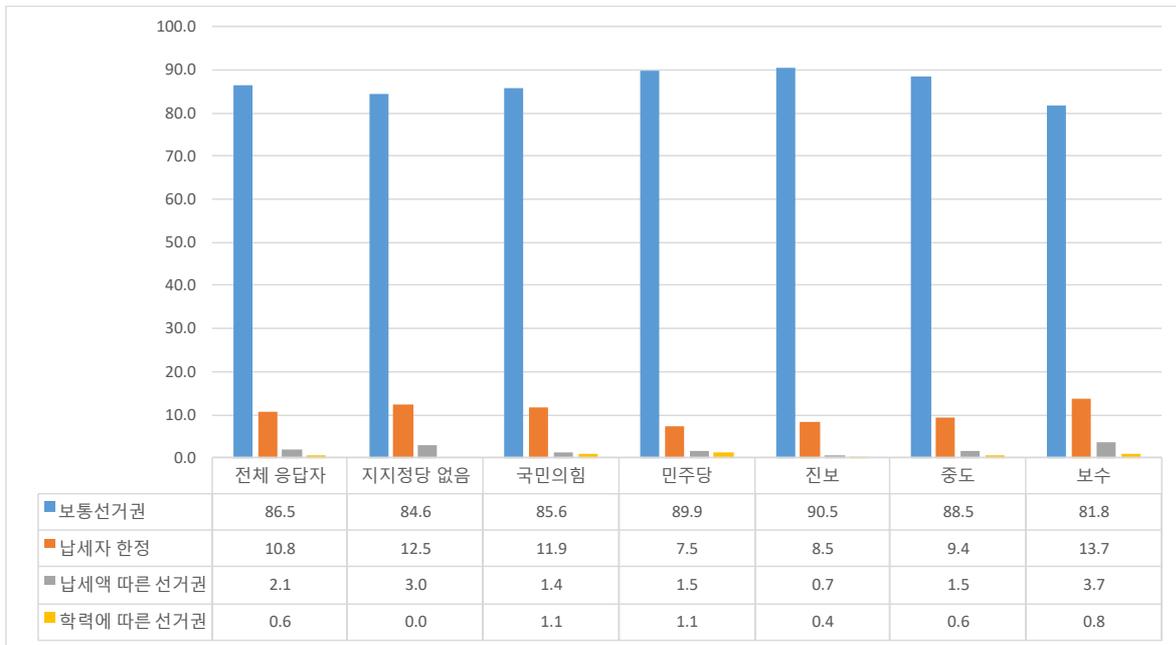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선거 때 말고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 1=매우 동의함; 2=조금 동의함; 3=별로 동의 안 함; 4=전혀 동의 안 함.
 - “매우 동의함”과 “조금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동의”로, “별로 동의 안 함”과 “전혀 동의 안 함” 응답을 합산하여 “비동의”로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선거는 유일한 정부 문책 수단

- 전체적으로 선거를 유일한 정부 문책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매우 높음(67.0%).
- 정치 성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진보층은 중도나 보수보다 비동의 비율이 미세하나마 높아(진보 대비 약 1.3%p, 보수 대비 약 2.2%p) 선거 외에도 정부 문책 수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I-4>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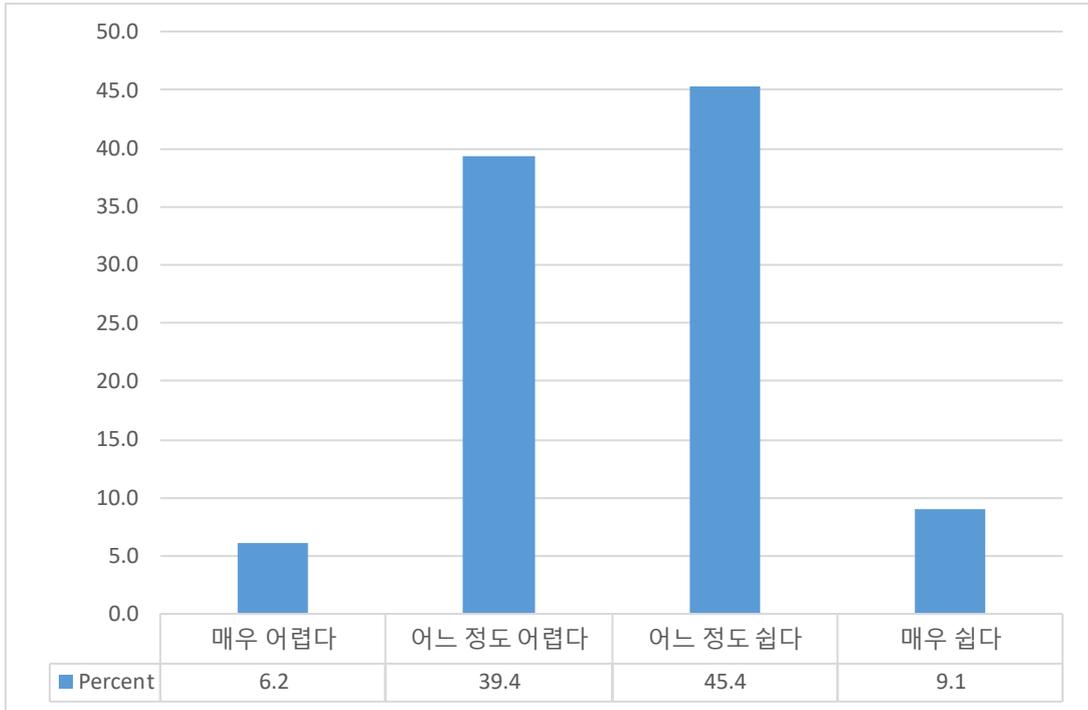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민주주의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격에 따라 투표권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문항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자격 제한 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보통 선거권); ②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납세자 한정); ③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납세액 따른 선거권); ④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학력에 따른 선거권),

■ 보통 선거권에 대한 압도적 지지

- 응답자 대다수(86.5%)가 보통 선거권을 자격 요건을 두는 선거권 제한에 비해 선호함.
-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대한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5> 정당 만들기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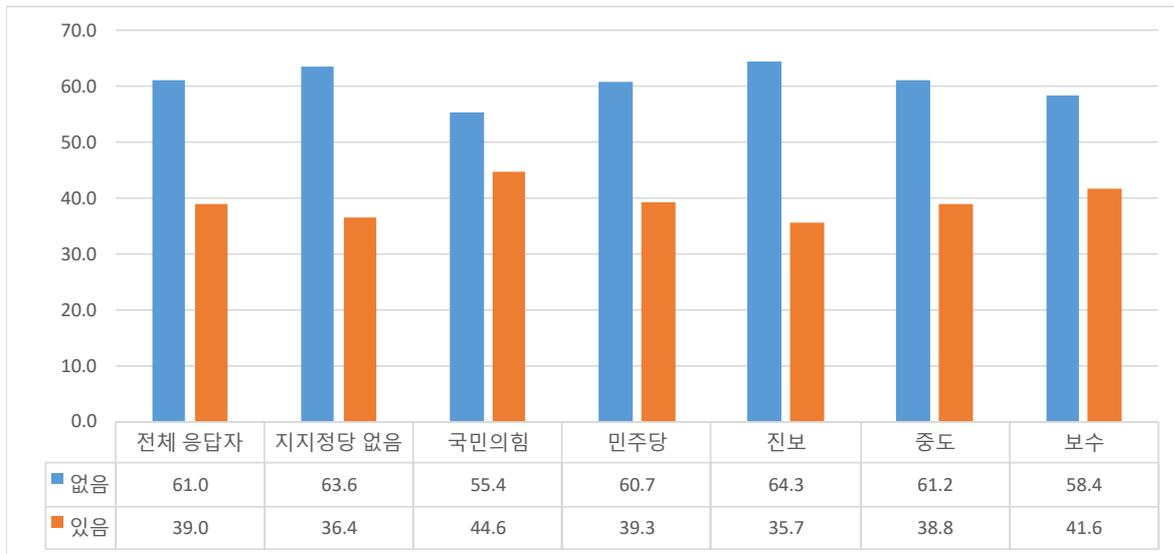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어렵다; 2=어느 정도 어렵다; 3=어느 정도 쉽다; 4=매우 쉽다.

■ 정당 만들기 용이함에 대한 이견이 팽팽함

- “어느 정도 쉽다”(45.4%)와 “매우 쉽다”(9.1%)를 합산하면 과반(54.5%)에 달함.
 -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도 낮지 않아(반올림하여 45.6%) 정당 설립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보임.
 - 현 정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여기는지 추후 조사에서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정치 성향과 사회경제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그림 Ⅲ-6> 작은 정당에 공정한 기회 여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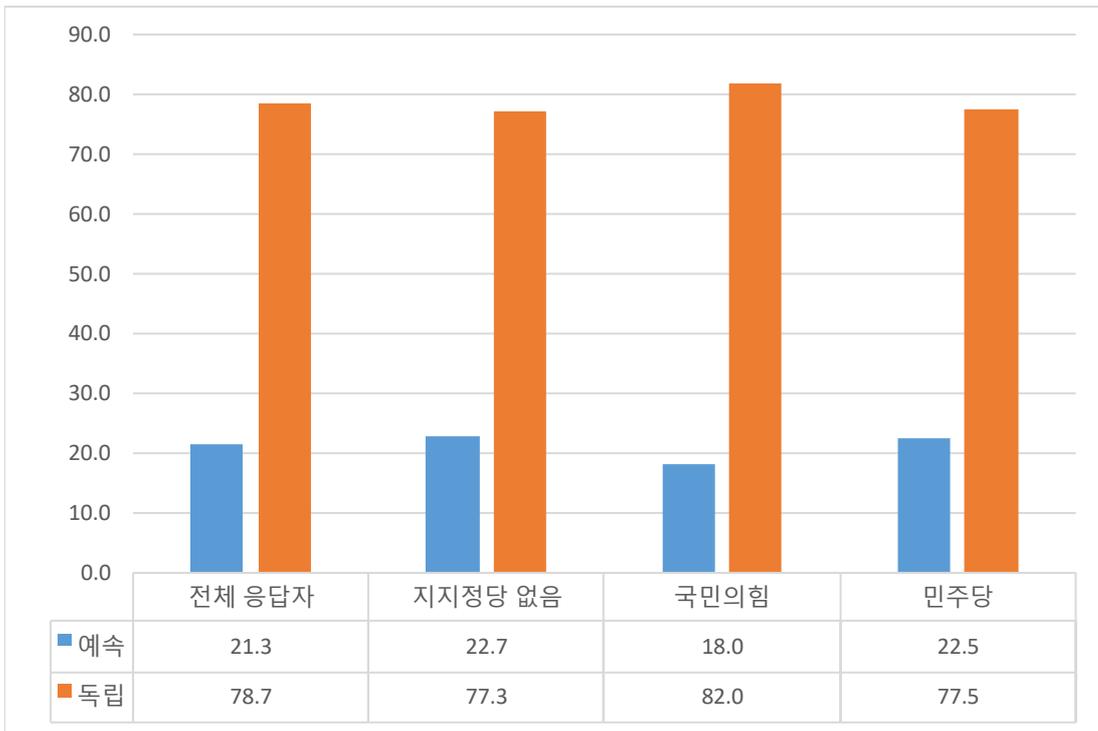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우리나라 선거에서 작은 정당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작은 정당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전혀 없다; 2=작은 정당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없는 편이다; 3=작은 정당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있는 편이다; 4=작은 정당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확실히 보장된다.
 - 1과 2를 합산하여 “없음”으로, 3과 4를 합산하여 “있음”으로 위 그래프에 표기함.

■ 작은 정당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대체로 없는 것으로 인식

- 응답자 과반(61.0%)가 작은 정당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인식함.
- 무당파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진보 또는 중도 이념 응답자들이 작은 정당에게 공정한 기회가 없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발견됨.

<그림 Ⅲ-7> 야당 정부 독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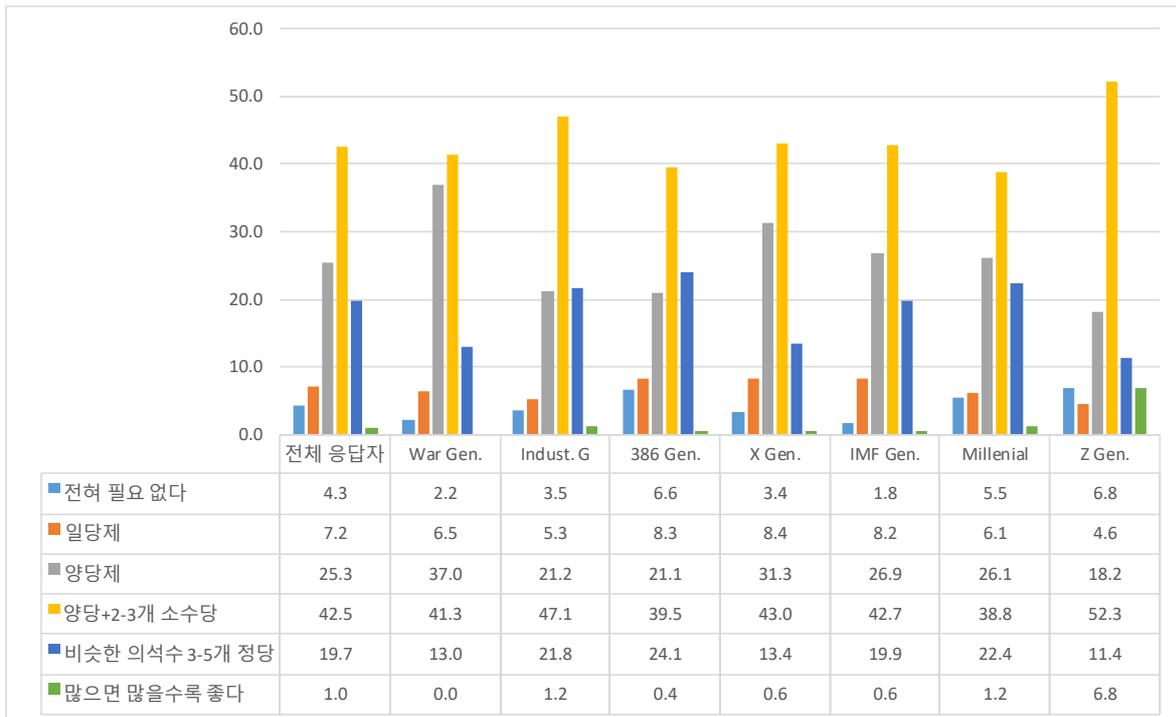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야당들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정부로부터 매우 독립되어 있다; 2=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3=어느 정도 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4=정부에 매우 예속되어 있다.
 - 1과 2를 합산하여 “독립”으로, 3과 4를 합산하여 “예속”으로 위 그래프에 표기함.

■ 압도적으로 야당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편으로 인식

- 응답자 대다수(78.7%)가 야당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평가함.
- 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77.5%)이 압도적임.

<그림 III-8>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당 수 인식: 세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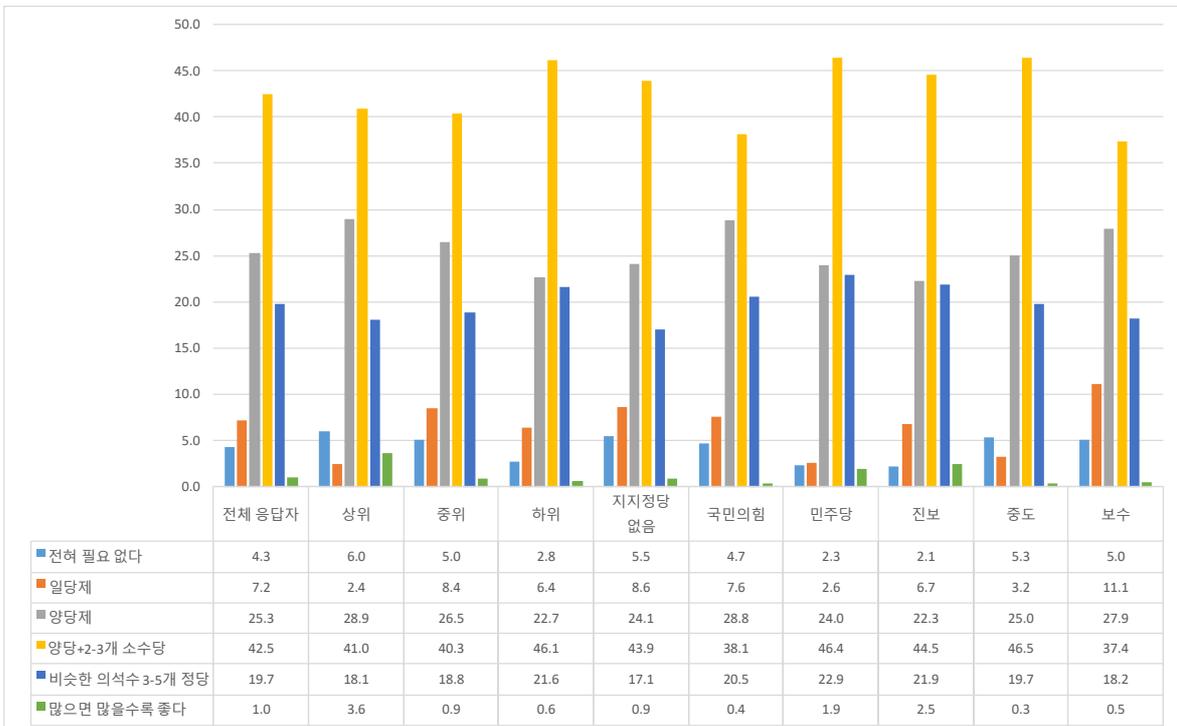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민주주의에 정당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 없다; 2=하나의 당만 존재하는 일당제가 좋다; 3=두 개의 큰 당이 경쟁하는 양당제가 좋다; 4=두 개의 큰 당과 소수정당이 2~3개 정도 있으면 된다; 5=비슷한 의석수를 가진 정당 3~5개 정도 있는 다당제가 좋다; 6=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양당제와 2~3개 소수당의 조합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현 정당 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거나 기준 효과(anchoring effect)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반민주주의 선호로 볼 수 있는 “전혀 필요 없다”(4.3%)와 “일당제 선호”(7.2%)가 합하여 11.5%로 낮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민주화 세대인 386세대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음. 이들은 “비슷한 의석수를 가진 정당 3~5개 정도 있는 다당제”(24.1%)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선호를 보임.
- 청년 세대인 Z세대에서만 “양당제와 2~3개 소수정당” 선호가 유일하게 과반(52.3%).

<그림 Ⅲ-9> 소득, 지지 정당, 이념별 민주주의 하 필요 정당 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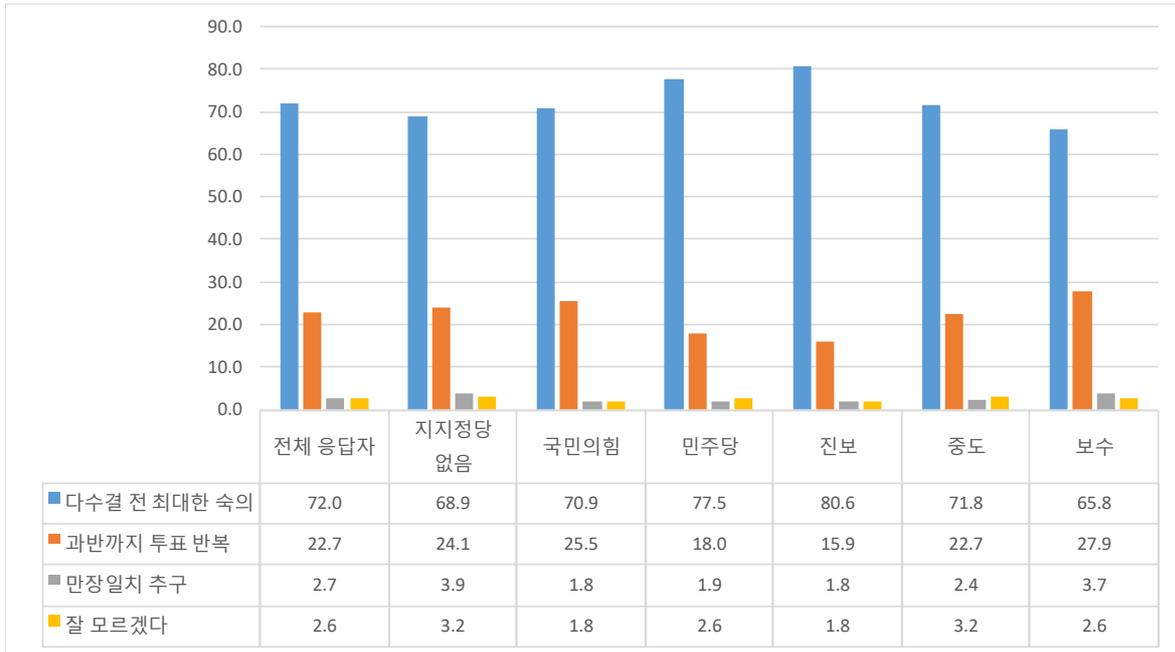


■ 양당제와 2~3개 소수당 선호가 가장 높음

- 국민의힘 지지자(38.1%)와 보수층(37.4%)이 상대적으로 “양당제와 2~3개 소수정당” 선호가 낮음.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층이 미세하나마 현 정당 체제보다 더 많은 수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IV.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림 IV-1>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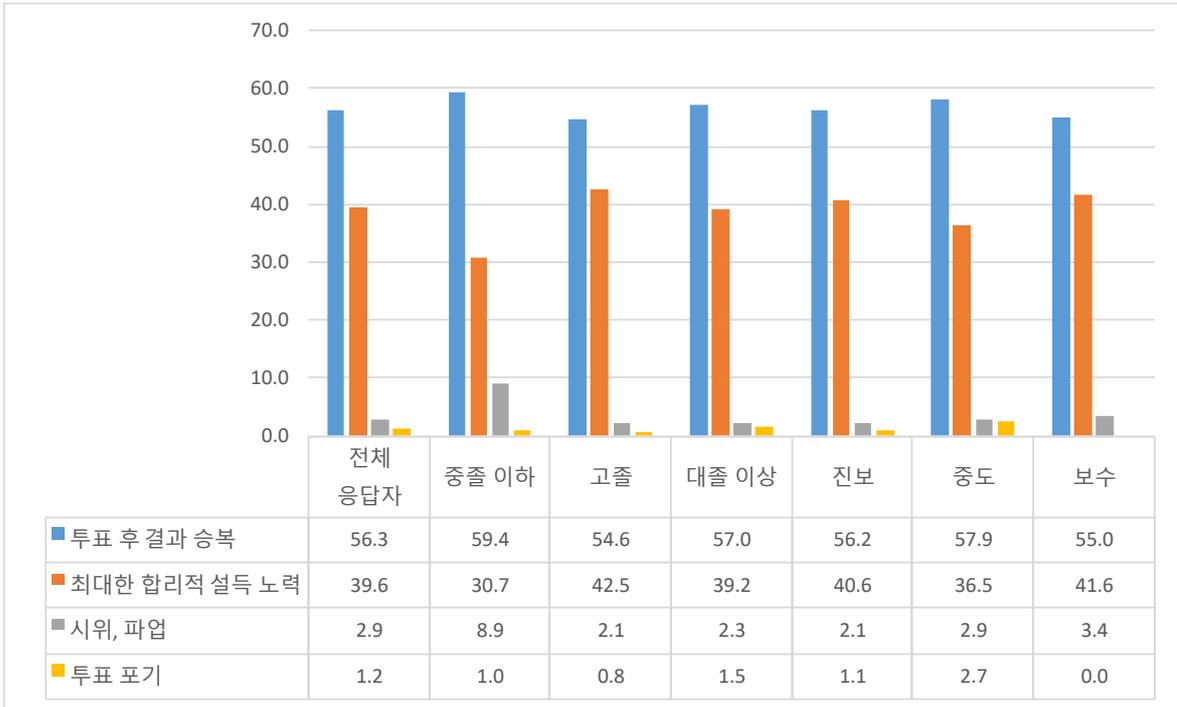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대립하는 여러 의견이 서로 경쟁합니다. 귀하는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가능한 한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논의한 후 다른 안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많은 안으로 정한다(다수결 전 최대한 숙의); 2=과반의 지지를 받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투표를 반복한다(과반까지 투표 반복); 3=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만장일치를 추구한다(만장일치 추구); 4=잘 모르겠다.

■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 전 최대한 숙의”를 선호

- 전체적으로 보아 “다수결 전 최대한 숙의”(72.0%)를 압도적으로 선호.
- 민주당 지지자(77.5%)와 진보 성향(80.6%)에서 “다수결 전 최대한 숙의”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짐.
-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조사에서는 숙의 과정이 없거나 숙의에 대한 강조를 낮춘 다수결을 선택지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2> 자신의 선호와 반대되는 의사에 대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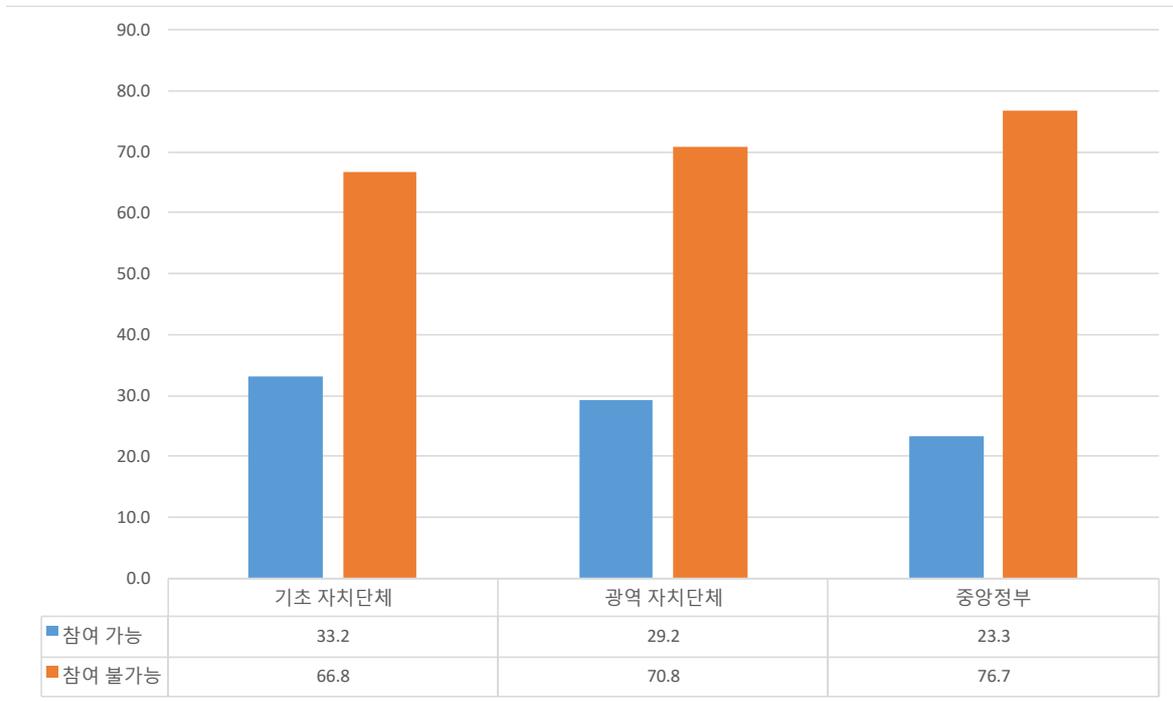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는 정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하면 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투표를 한 후 다수의 의견에 승복한다; 2=최대한 합리적인 설득(공청회, 숙의 토론회, 공론화 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바꾸도록 노력한다; 3=시위, 파업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다수의 의견을 바꾸도록 노력한다; 4=투표를 포기한다.

■ 투표 참여 후 다수 의견에 승복한다는 비율이 반수를 넘어 가장 높음.

- 공청회, 숙의 토론회, 공론화 등 최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바꾸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고졸 이상과 진보와 보수 성향 모두 40% 안팎의 지지를 보임.
-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보건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림 IV-3> 정부 수준별 의사결정과정 참여 용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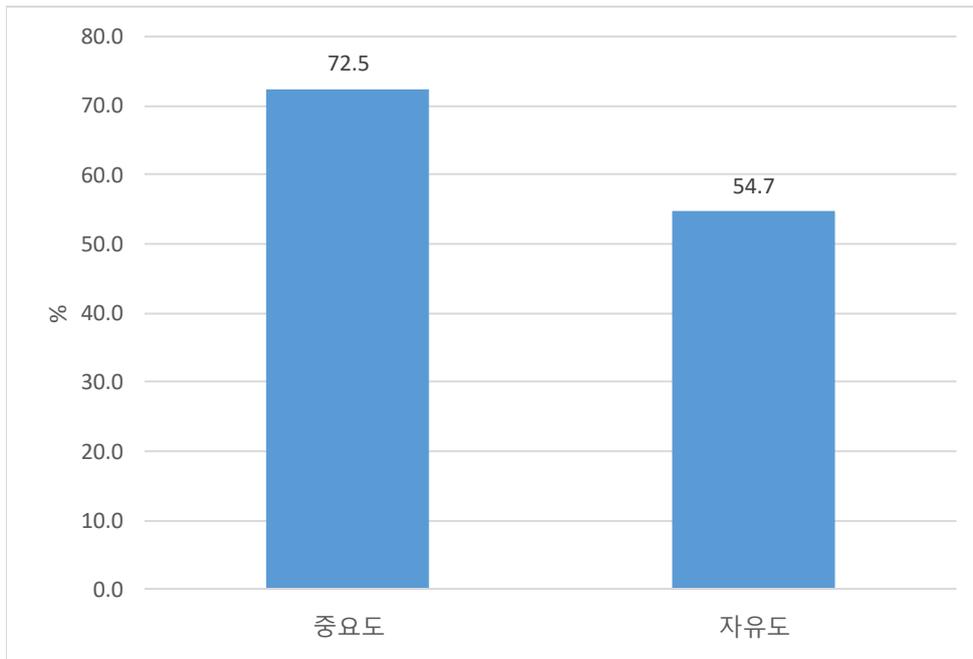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일반 시민이 시, 군, 구 같은 기초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자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수준별 세 개의 별도 문항
 - 1=전혀 참여할 수 없다; 2=거의 참여할 수 없다; 3=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 4=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 1과 2를 합산하여 “참여 불가능”으로, 3과 4를 합산하여 “참여 가능”으로 위 그래프에 표기함.

■ 대체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나 기초 자치단체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전체적으로는 정부 수준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 다만, 기초(33.2%) > 광역(29.2%) > 중앙정부(23.3%) 순으로 일상생활에 가까운 정부일수록 의사 결정 참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정치 성향과 사회경제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그림 IV-4> 공청회 중요도와 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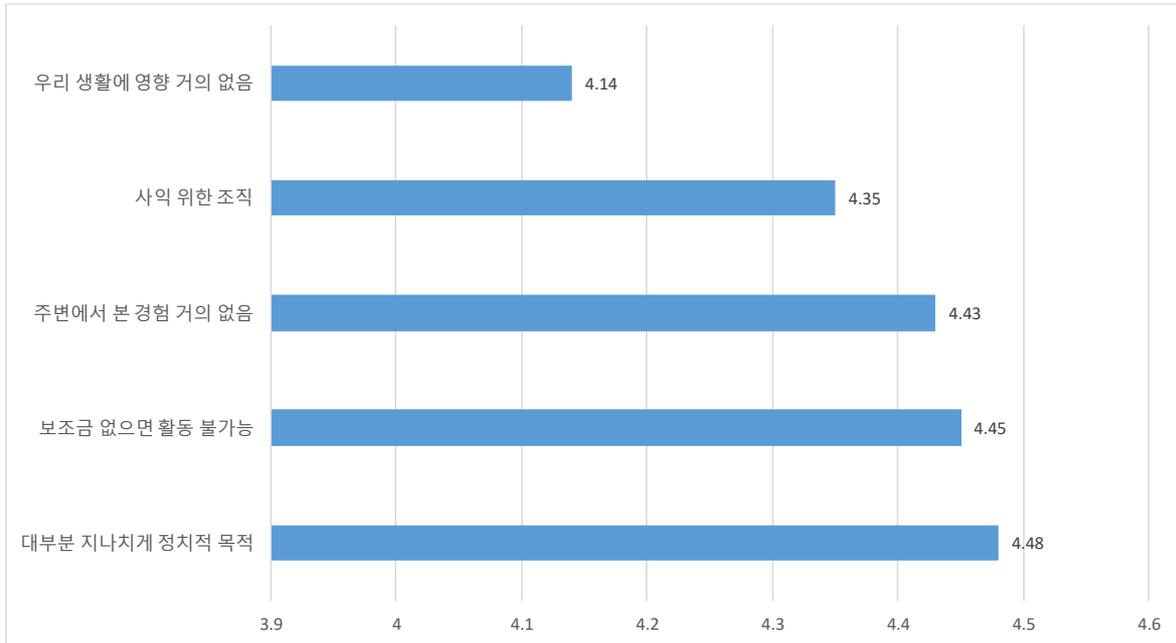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정당들이 개최하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요도)
 -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거의 중요하지 않다; 3=어느 정도 중요하다; 4=매우 중요하다.
 - 3과 4를 합산한 “중요도”를 위 그래프 왼쪽에 표기함.
-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정당들이 개최하는 공청회나 설명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자유도)
 - 1=전혀 자유롭지 않다; 2=거의 자유롭지 않다; 3=어느 정도 자유롭다; 4=매우 자유롭다.
 - 3과 4를 합산한 “자유도”를 위 그래프 오른쪽에 표기함.

■ 공청회와 설명회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참여가 자유롭지는 않다고 인식

- 중요도는 “어느 정도 중요”와 “매우 중요”를 합하여 72.5%로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으나 자유도, 즉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자유롭다”는 인식이 과반(54.7%)에 머무름.
- 곧, 참여의 중요도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함.

<그림 IV-5>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 조사 문항

- “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로 답해주십시오.”
 - 1)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대부분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 2)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경험이 거의 없다(주변에서 본 경험 거의 없음); 3)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우리 생활에 영향 거의 없음); 4)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활동가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조직한 것이다(이익 위한 조직); 5)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다(보조금 없으면 활동 불가능).
 - 위 5개 시민단체에 관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위 그래프에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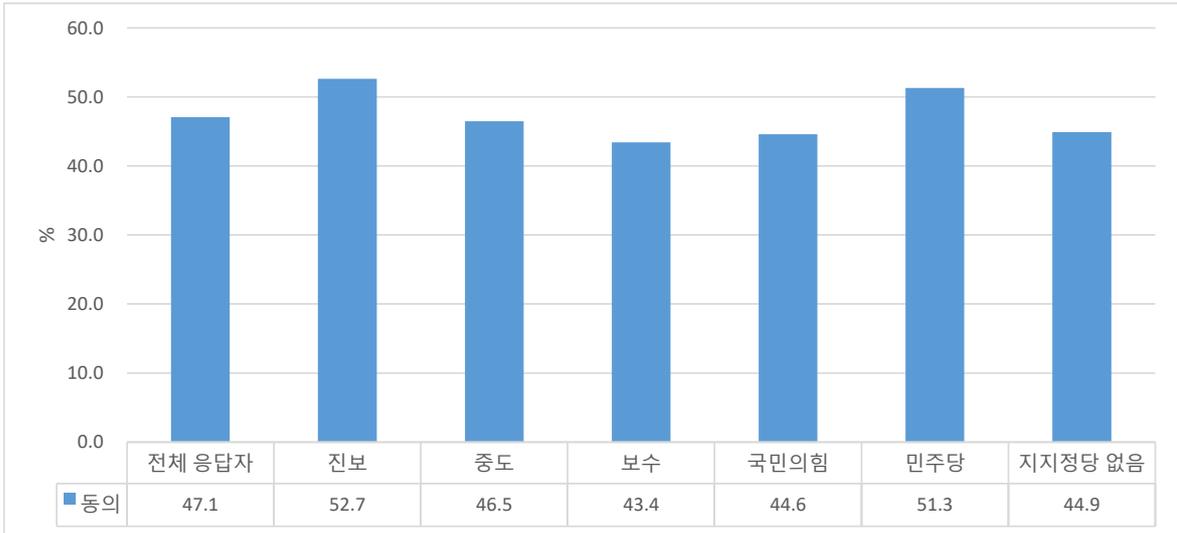
■ 시민단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

- 평균이 동의도 반대도 아닌 것을 가리키는 기준점인 4점 초과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민단체 대부분이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M=4.48).

V.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1. 사법부의 역할

<그림 V-1> 법원의 정부 능력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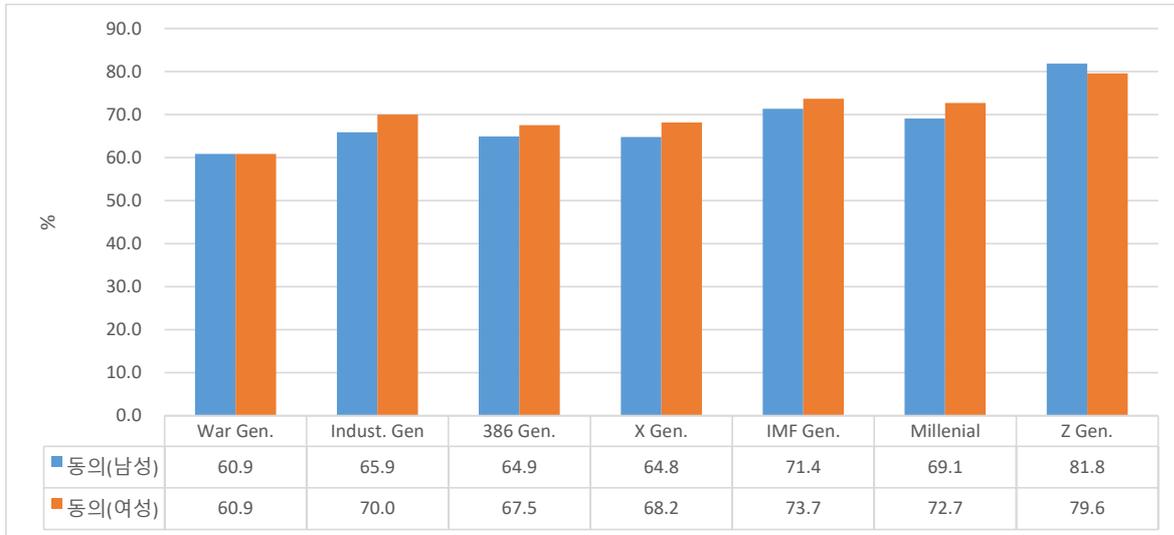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 1=매우 동의함; 2=조금 동의함; 3=별로 동의 안 함; 4=전혀 동의 안 함.
 - “매우 동의함”과 “조금 동의함” 답변을 합산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함.

■ 법원의 정부 견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

- 진보 응답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더 컸음.
- 이는 2024년 7월이라는 조사 시점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음.
- 진보는 보수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법원의 행정부 견제 능력에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그림 V-2> 경찰이나 법원의 시민 보호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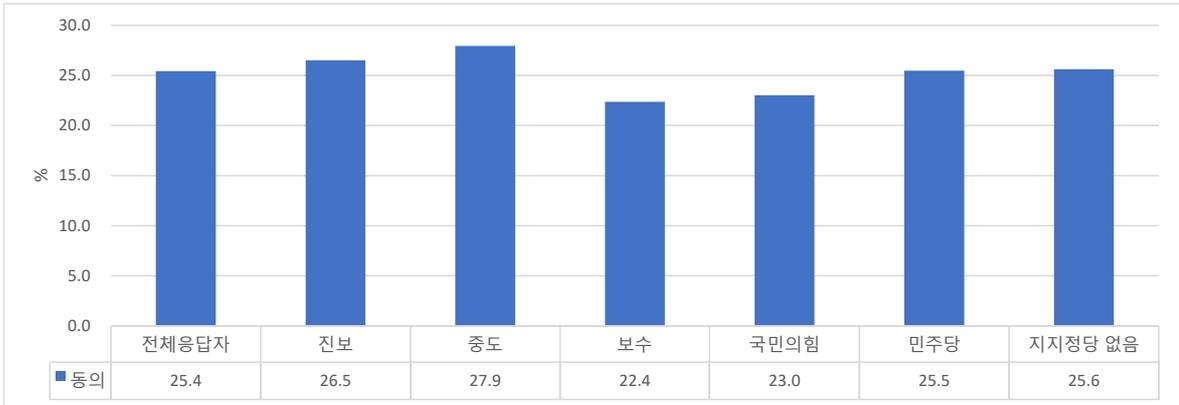
- “남성(여성)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동의”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젊은 세대일수록 법의 보호기능에 긍정적

- 젊은 세대일수록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긍정하는 경향.
- 산업화 세대가 가장 부정적, IMF 세대가 가장 긍정적.
- 권위주의의 기억을 갖고 있는 노장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는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 공권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2. 한국의 정치적 폭력

<그림 V-3> 한국에서 정치 살인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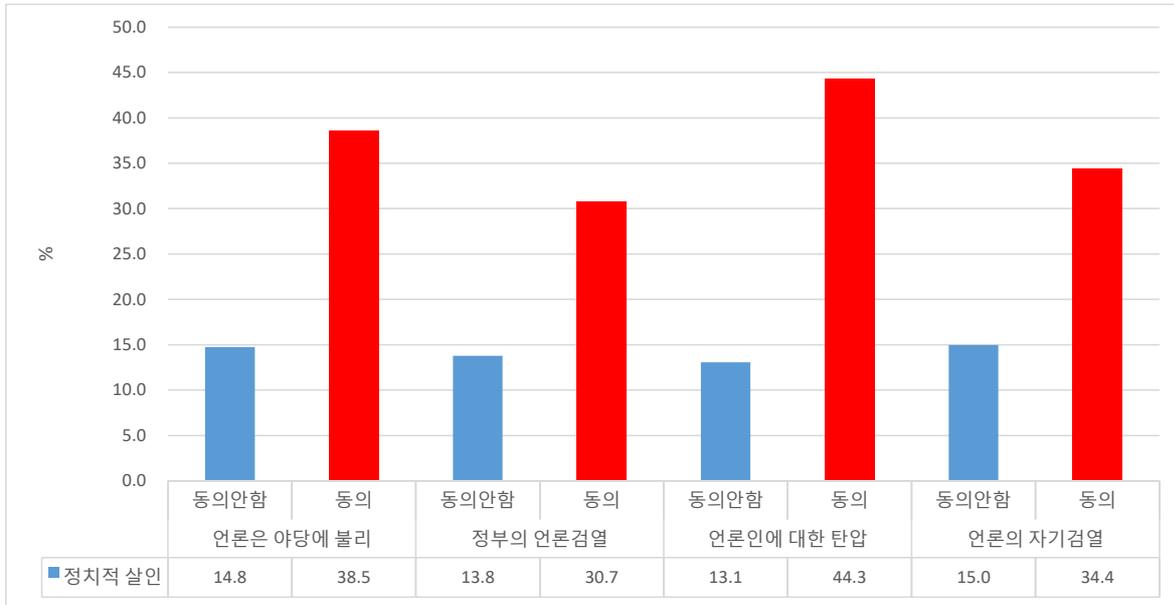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동의”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정치 살인”에 대한 높은 동의율

-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이 한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매우 괴리된 인식인데, 지지 정당이나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이러한 태도가 편재해 있음.
- 코호트 별로도 이 문항에 대한 태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2024년 1월 이재명 피습 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음. 혹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음모이론의 영향일 수도 있음.
- 실제로 언론의 편향성이나 정부의 언론 탄압, 검열 등과 같은 변수와 이 질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음.
- 즉,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살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가설의 간접적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V-4> 언론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살인 인식 교차분석



■ 언론 태도 조사 문항

- “언론들이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언론은 야당에 불리)
- “정부가 신문이나 방송국을 직간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정부의 언론 검열)
- “언론인들이 정당한 언론 활동 때문에 명예훼손 위협, 체포, 투옥, 구타, 살해 등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언론인에 대한 탄압)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언론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언론의 자기검열)
 - 언론 관련 네 개의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측정: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동의”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동의 안 함”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언론 자유와 정치적 폭력 인식

-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한국에 정치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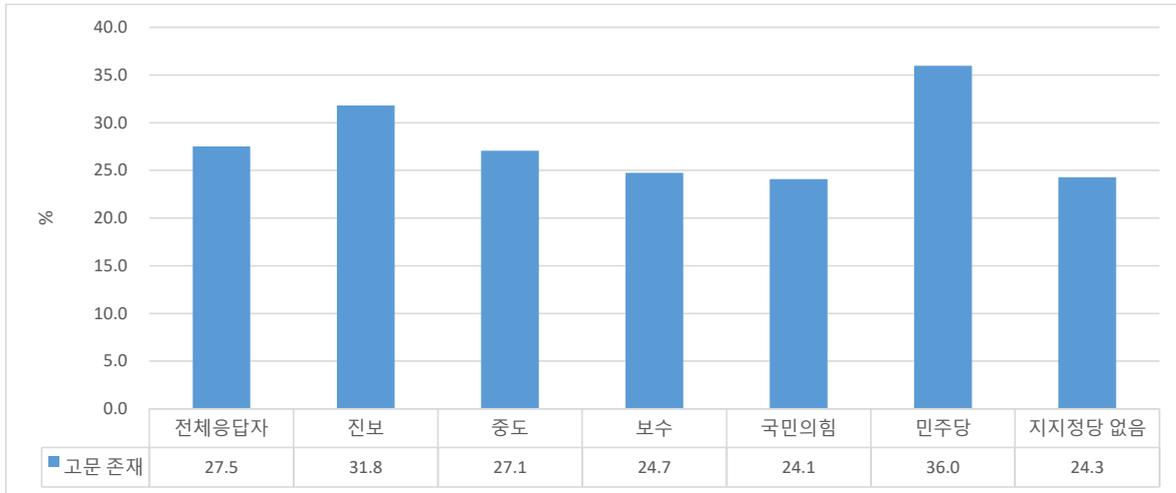
- 언론이 야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38.5%가 정치적 살인이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4.8%만이 정치적 살인의 존재를 긍정.
- 네 개의 언론 문항 모두가 정치적 살인의 발생 변수와 중간 혹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아래 표에서 피어슨 상관관계수¹⁾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1> 언론 변수와 정치적 살인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언론 변수	언론은 야당이 불리	정부의 언론 검열	언론인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기검열
피어슨 상관관계수	0.25	0.26	0.37	0.22

1)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직선적인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보여준다. 즉,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의 값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상관관계 없음을, +1은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 -1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V-5> 한국에서의 정치적 고문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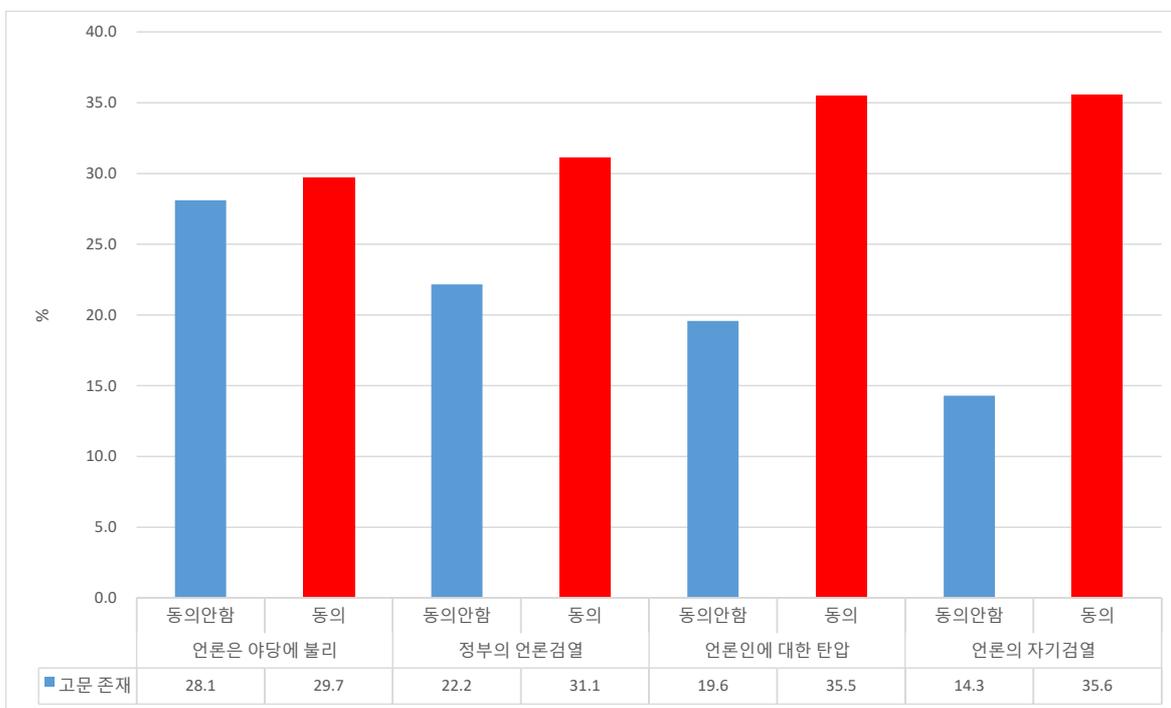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고문 존재”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전체 응답자의 27.5%가 한국에서 정치적 고문이 존재한다고 답함.

- 전체 응답자의 27.5%가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이 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하지 않음 4.4%; 별로 동의하지 않음 23.1%).
-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존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확신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 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
- 언론의 자유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음.

<그림 V-6> 언론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고문 인식 교차분석



■ 언론 자유에 대한 불안감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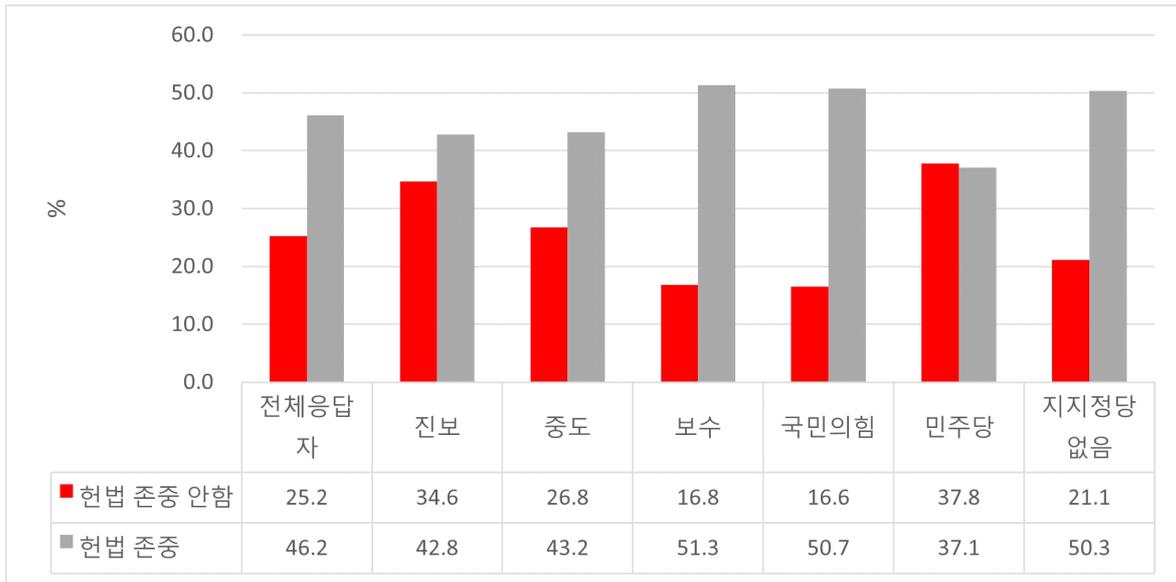
- 정치적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 고문을 자행한다고 믿을 확률이 높음.
 - 아래 표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2> 언론 변수와 정치적 고문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언론변수	언론은 야당이 불리	정부의 언론검열	언론인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기검열
피어슨 상관계수	-0.13	-0.18	-0.25	-0.25

3.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그림 V-7> 행정부의 헌법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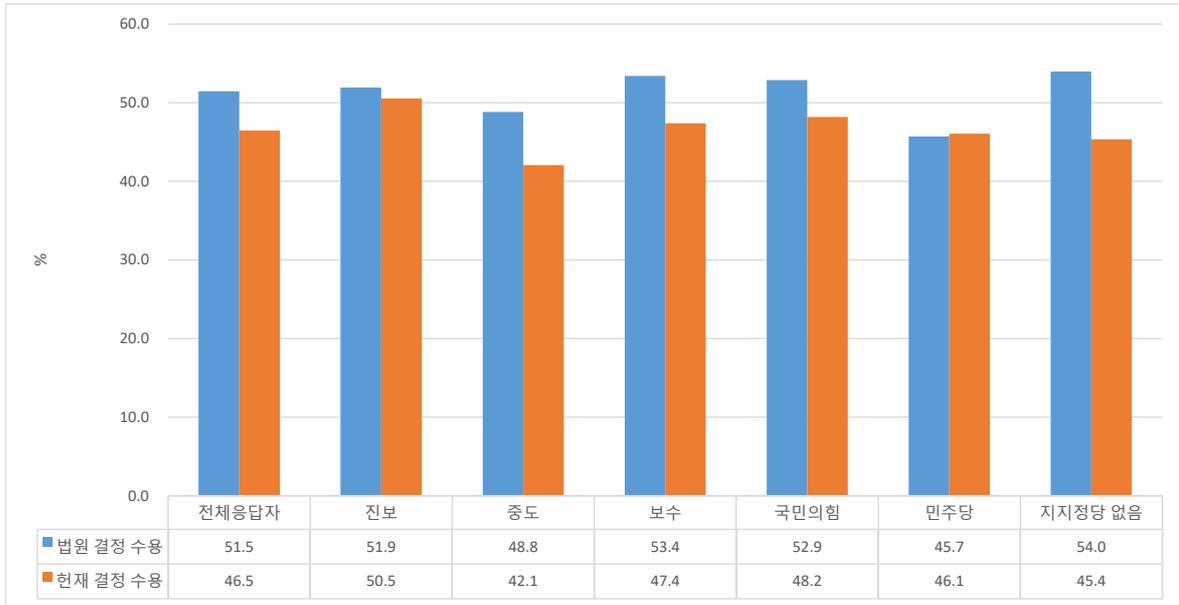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대통령,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은 헌법을 존중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헌법 존중”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헌법 존중 안 함”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행정부의 헌법 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감

-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인 25.2%가 행정부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변.
- 진보 및 중도 응답자가 보수 응답자에 비해 행정부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높아서 양극화된 반응을 보였음.
- 행정부의 헌법에 대한 태도에 가장 비판적인 것은 민주당 지지자였음. 무당파의 경우 헌법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자와 다르지 않음.
 - 이념, 정당 평균값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이념 집단에서도 행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는 답변은 50% 수준에 머무름. 이는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그림 V-8> 행정부의 사법부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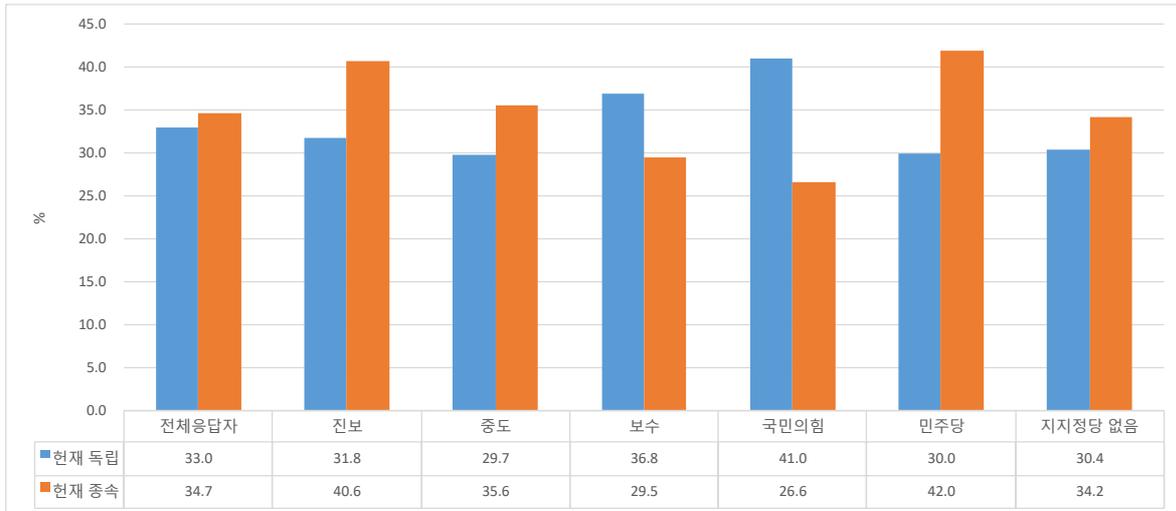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정부는 법원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한다.”(법원 결정 수용)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한다.”(헌재 결정 수용)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두 변수에 대한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각각 “법원 결정 수용” 및 “헌재 결정 수용”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능력에 대한 회의감

-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만이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51.5%) 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46.5%)을 수용한다고 답변.
- 이는 한국 국민들이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행정부가 편의에 따라서만 사법부,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식하는 것은 한국의 비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행정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보여줌.

<그림 V-9>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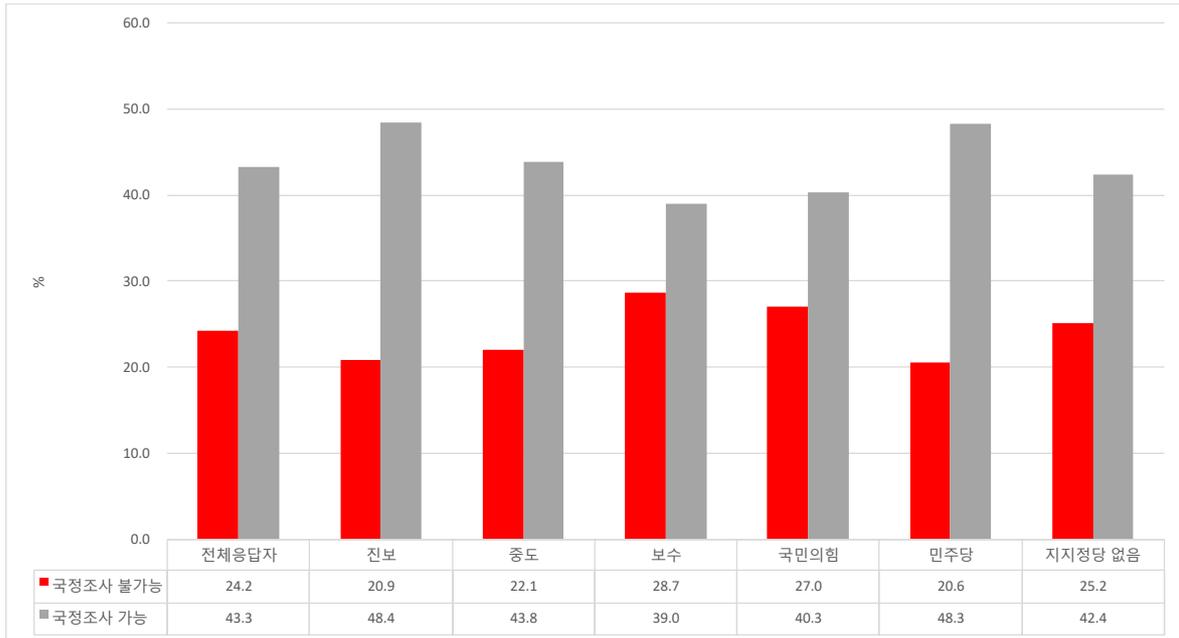
- “헌법재판소가 정부 현안에 대해 심리할 때, 법률과 규정에 상관없이 단순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현재 종속”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현재 독립”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

- 약 3분의 1 정도의 응답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의 선호에 종속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비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응답이 오히려 적은 편.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만 현재가 비정치적이라는 대답이 다수.
- 전체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줌.

4.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그림 V-10> 야당의 행정부 견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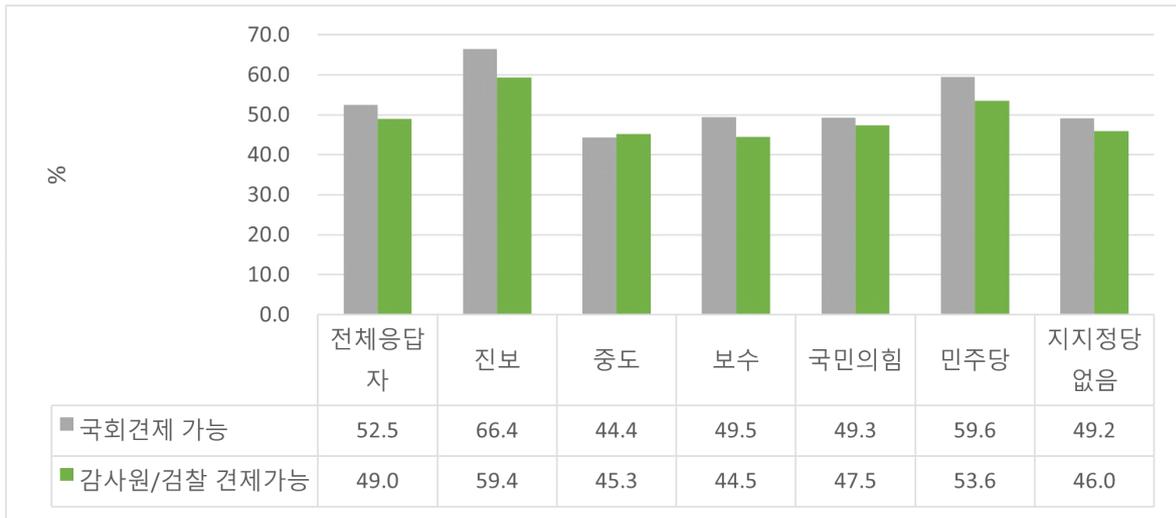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야당은 여당이 반대해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산하여 “국정조사 가능”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국정조사 불가능”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야당의 정부 견제 능력에 대한 평가

- 전체 응답자 중 24.2%가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
- 진보(48.4%) 및 민주당 지지자(48.3%)가 보수(39.0%)나 국민의힘 지지자(40.3%)보다 야당의 정부 견제 능력에 높은 동의를 보내고 있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 진보 및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문항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개헌선에 근접하는 의석을 얻은 야당이 행정부에 대해 국정조사나 감사를 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희망을 섞어 해석했을 가능성 있음.

<그림 V-11> 국회와 감사원/검찰의 행정부 견제 가능성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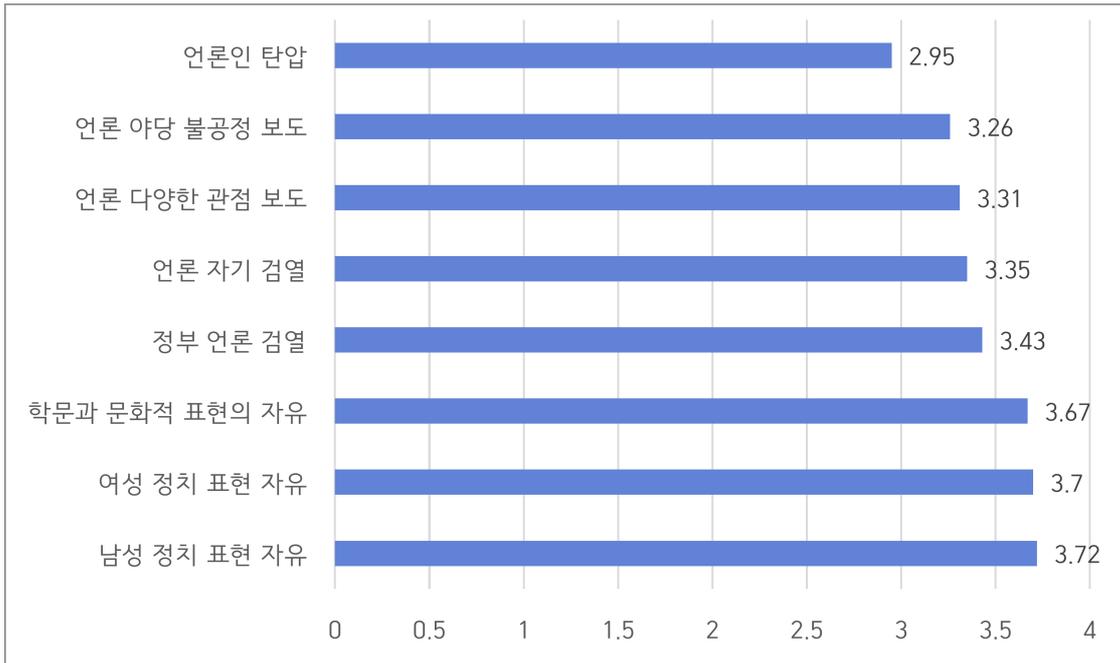
- “만일 행정부가 헌법을 어기거나, 불법적 또는 비도덕적 행동과 관계되었다면, 국회는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만일 행정부처 공무원이 헌법을 어기거나, 불법적 또는 비도덕적 행동과 관계되었다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등 입법부 이외의 기관이 이들에 대해 불리한 결정 또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위의 두 문항에 대한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응답을 합산하여 각각 “국회 견제 가능”과 “감사원/검찰 견제 가능”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행정부 권력에 대한 우려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5%에 머무름. 감사원이나 검찰의 견제 능력에 대해서는 더 낮은 49%만 긍정적으로 답변.
- 진보 응답자, 민주당 지지자의 견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야당이 거의 개헌선에 근접하는 의식을 차지했음에도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이 긍정.
- 이는 한국의 비대한 행정부의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림 V-12> 표현과 언론의 자유 및 공정성 인식



■ 조사 문항

- “다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8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 2) 남성들은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정치 문제를 말할 수 있다.
 - 3) 여성들은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정치 문제를 말할 수 있다.
 - 4) 언론들이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5) 정부가 신문이나 방송국을 직간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 6) 언론인들이 정당한 언론 활동 때문에 명예훼손 위협, 체포, 투옥, 구타, 살해 등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 7) 주요 신문 및 방송 매체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 8)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언론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각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을 위 그래프에 표시함. 5점 척도이므로 평균 2.5점 이상은 동의로 해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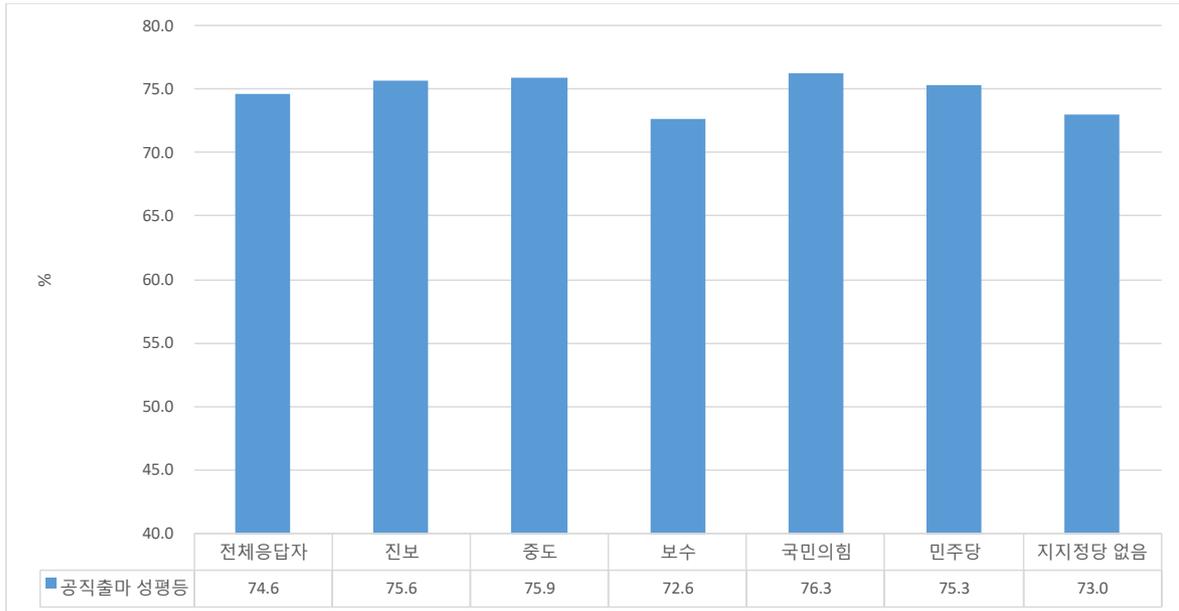
■ 시민적 자유에 대한 위협

-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학문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다양한 관점 보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정부의 언론 검열(M=3.43), 언론의 자기검열(M=3.35), 야당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M=3.26)와 언론인 탄압(M=2.95) 등과 같이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4월 발표된 IDEA 인식 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함. 이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전문가 조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한국 국민의 경우 절반 정도만 확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VI. 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1. 젠더와 평등

<그림 VI-1> 공직 출마에서의 성평등 인식



■ 조사 문항

- “여성들은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 1=매우 자주 일어난다; 2=자주 일어난다; 3=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매우 자주 일어난다”와 “자주 일어난다” 응답을 합산하여 “공직 출마 성평등”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여성의 공직 출마 기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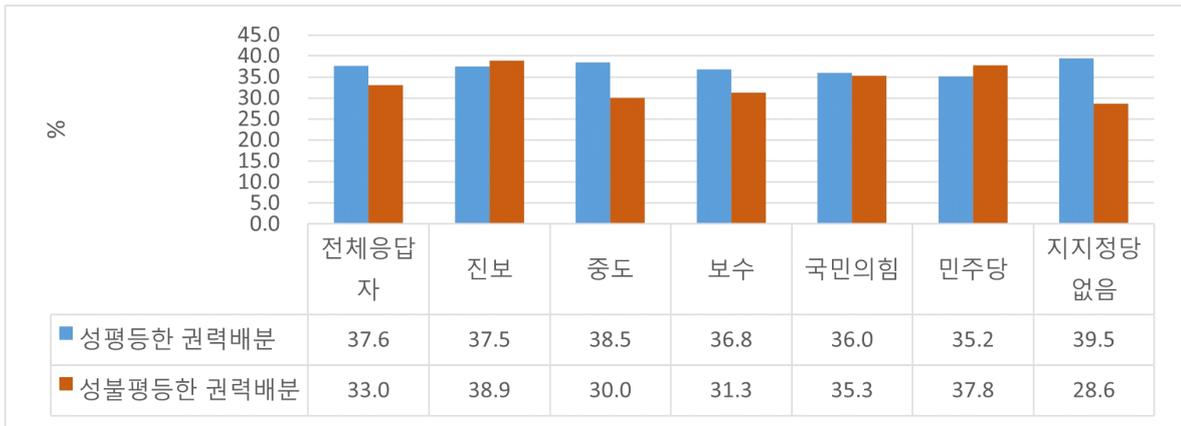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에 가까운 74.6%가 여성이 공직 출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인식.
-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국제지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 이러한 국제지표의 부정적인 평가와 대조적으로 한국 국민은 여성의 공직 기회가 낮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이념별, 지지 정당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는 여성 응답자들이 여성이 불평등한 공직 출마 기회를 갖는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음.

<표 VI-1> 공직 출마에서의 성평등 인식: 성별 비교

	남성	여성
매우 자주 일어난다	20.7	14.5
자주 일어난다	54.0	60.0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4.1	24.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1.2	1.2
합계	100.0	100.0

<그림 VI-2> 권력 배분에서의 성평등 인식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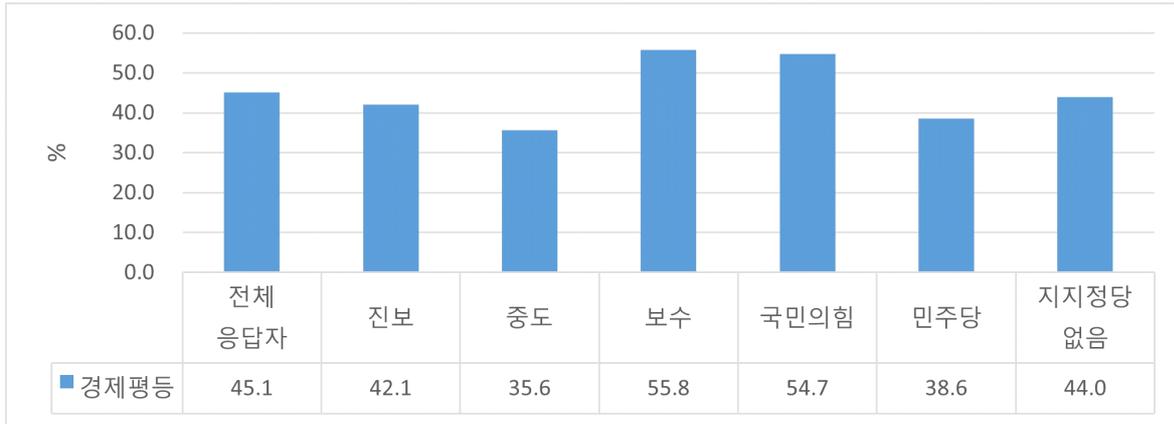
- “권력은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성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성불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불평등한 권력 배분과 성평등

- 공직 출마 기회의 경우와 달리, 권력 배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전체 응답자의 37.6%만이 성별과 상관없이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고 답함. 이러한 태도는 지지 정당과 이념에 상관없이 거의 골고루 분포.
- 이 문항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반응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종합해 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고위직에 이전에 비해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여성들에게도 공직 출마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몇몇 엘리트 여성의 고위 공직자 직위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권력분배가 여성에게까지 평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음.
- 즉, 한국인들은 아직 한국 사회가 권력분배 차원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직자 출마라는 차원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음.

2. 경제와 평등

<그림 VI-3> 경제적 계층과 정치적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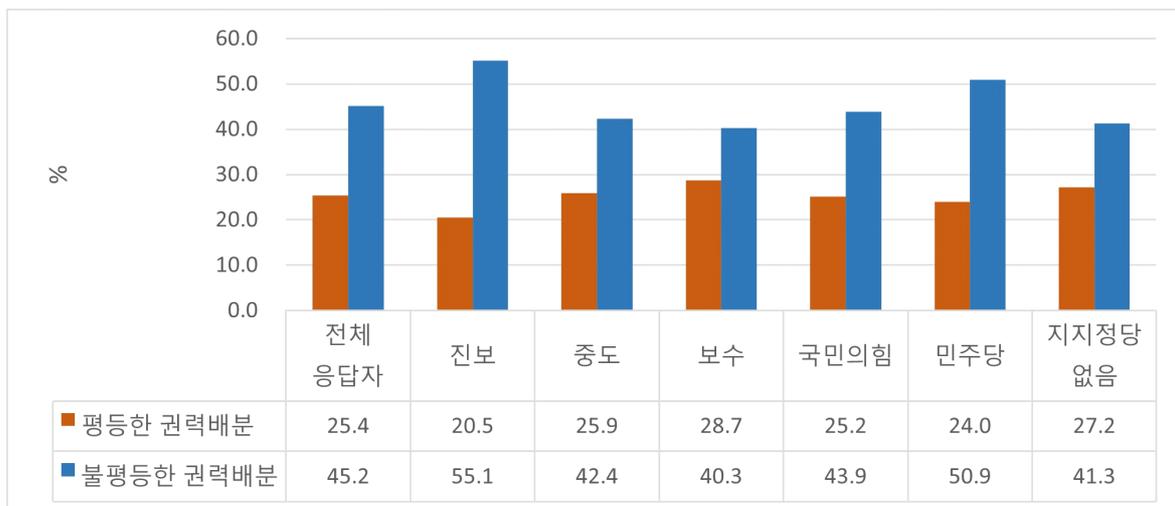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매우 동의함; 2=조금 동의함; 3=별로 동의 안 함; 4=전혀 동의 안 함.
 - “매우 동의함”과 “조금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경제 평등”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양극화된 경제 평등 인식

- 이념, 정당에 따른 인식 차이 존재. 중도(35.6%) > 진보(42.1%) > 보수(55.8%) 순으로 경제적 계급의 차이에 따라 정부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고 인식.
-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계급의 영향이 적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
- 소득 수준 및 자산 수준으로 교차 분석했을 때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에서 경제 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전체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빈부격차에 따른 정부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
- 흥미로운 것은 경제 평등 문제에 대해 중도 이념 응답자(35.6%)들이 진보 응답자(42.1%)들보다도 더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것. ($p < 0.1$)
- 이는 한국에서의 이념 스펙트럼이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

<그림 VI-4> 권력 배분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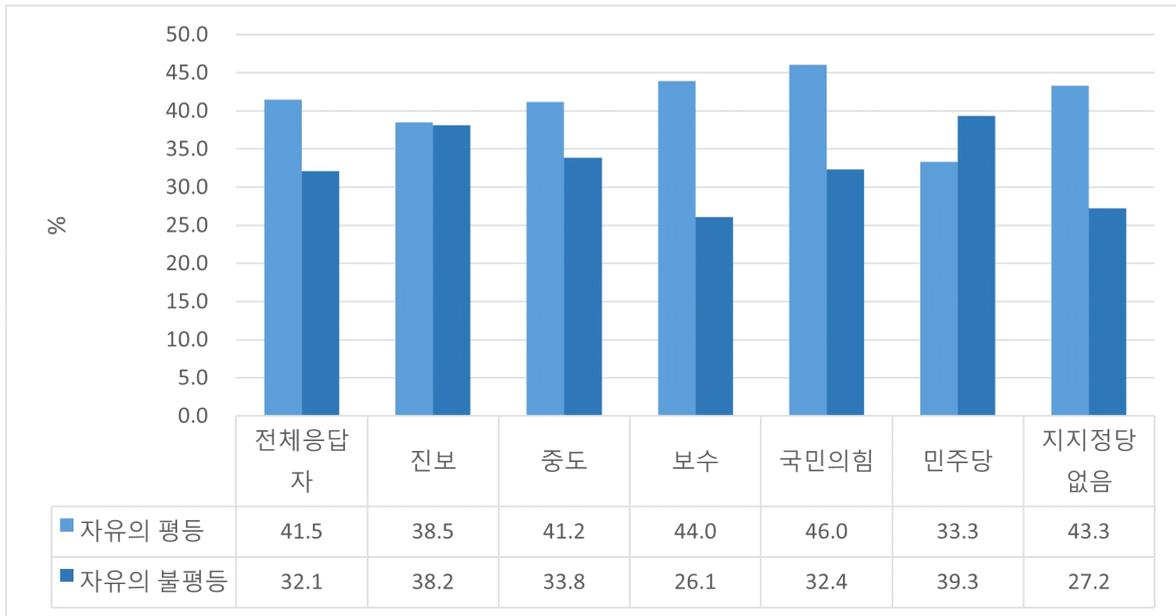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권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불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사회경제적 계급과 권력의 불평등

- 여성의 공직 출마 기회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 민주주의 지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배분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순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임.
- 하지만 이 경우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국제지표에서의 평가와 일관됨. 즉,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 배분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높음.
- 45.2%의 응답자가 정치권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인식. 진보와 민주당 지지자에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강함.
- 그러나 평균값 비교에서 지지 정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진보와 보수 이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 발견됨.
- 세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쟁 세대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그림 VI-5> 경제적 계급과 자유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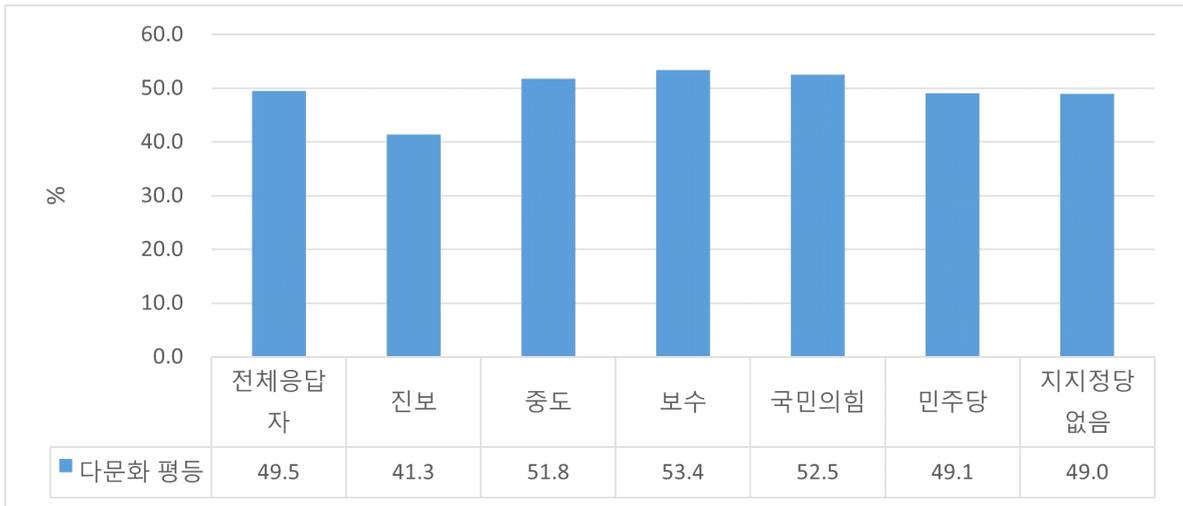
-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시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자유 의 평등”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자유 의 불평등”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경제적 계급과 자유

- 권력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2.1%를 기록.
- 역시 이념별, 지지 정당별 차이 있음. 진보 및 민주당이 빈곤층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3. 문화 및 사회적 배경과 평등

<그림 VI-6> 다문화주의와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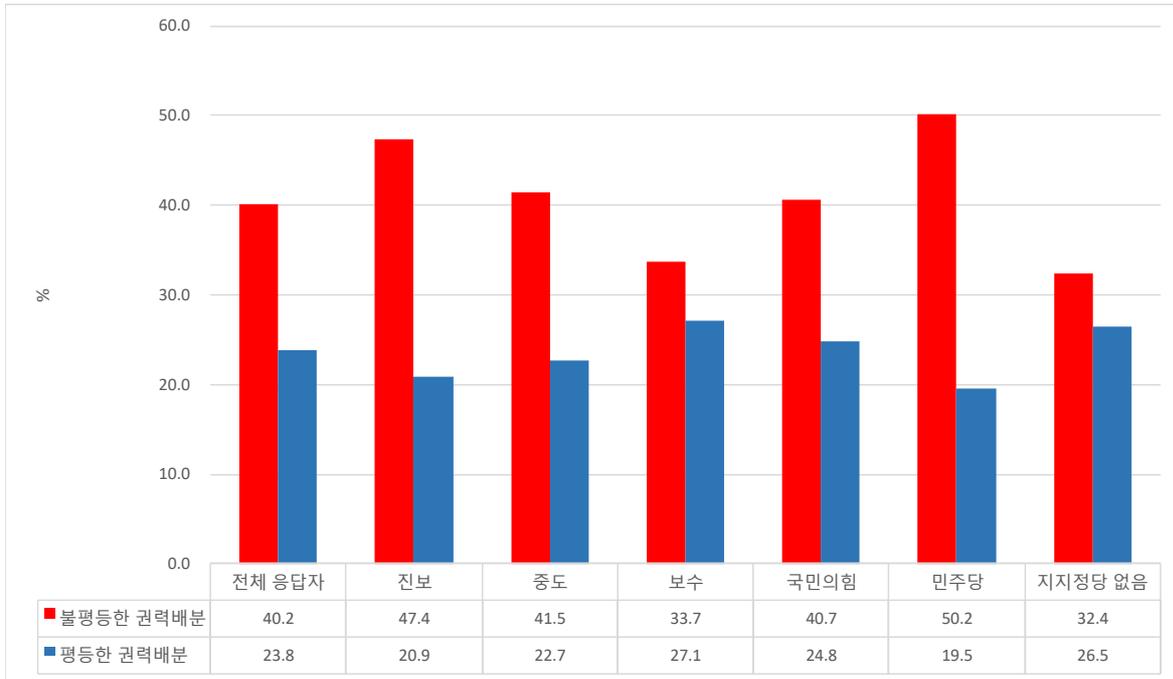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매우 동의함; 2=조금 동의함; 3=별로 동의 안 함; 4=전혀 동의 안 함.
 - “매우 동의함”과 “조금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다문화 평등”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미흡한 평등 민주주의

- 절반 정도의 응답자(49.5%)만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정부로부터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응답.
-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념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 진보가 보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그러나 이 문항은 다문화 국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찬반을 확실히 보여주지는 않음.
- 즉, 최근의 혐종 감정의 발호 등을 감안했을 때, 다문화 국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선호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짐작됨.
- 차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조사 문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응답자 본인들의 다문화 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위 문항과 교차 분석하여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됨.

<그림 VI-7> 사회적 다양성과 권력분배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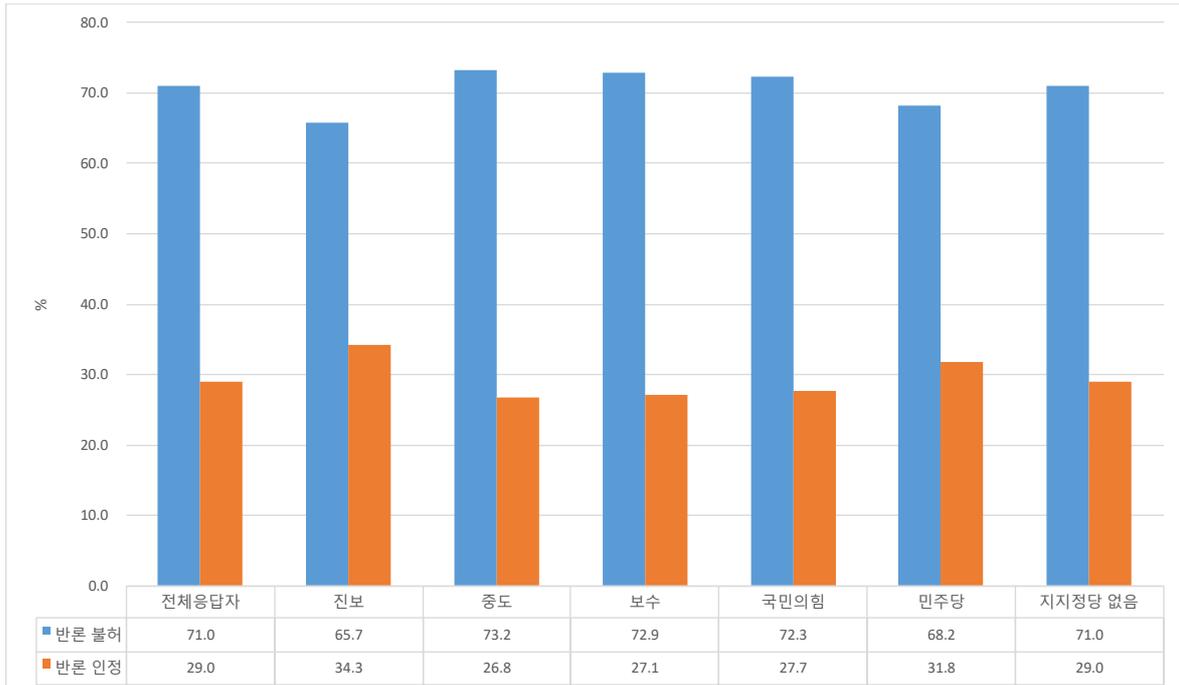
- “권력은 언어, 민족, 종교, 인종, 지역과 같은 사회 집단에 상관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 응답을 합산하여 “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불평등한 권력 배분”으로 위의 그래프에 표기함.

■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 한국 사회에서 권력 배분이 언어, 민족, 종교, 문화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
- 전체 응답자의 23.8%만이 긍정. 40.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 진보가 보수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VII.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림 VII-1> 속의 과정에서의 반론 인정



■ 조사 문항

- “중요한 정책 변경을 고려할 때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반론이 허용되지 않거나 반론을 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2=반론은 적어도 일부 당사자에게는 허용되지만 거의 항상 무시된다; 3=반론을 인정하지만 반론이나 반론을 제안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반론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4=반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반론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5=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반론을 대부분 거부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6=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며 종종 반론을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 1, 2, 3을 합산하여 “반론 불허”로, 4, 5, 6을 합산하여 “반론 인정”으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반론이 인정되지 않는 속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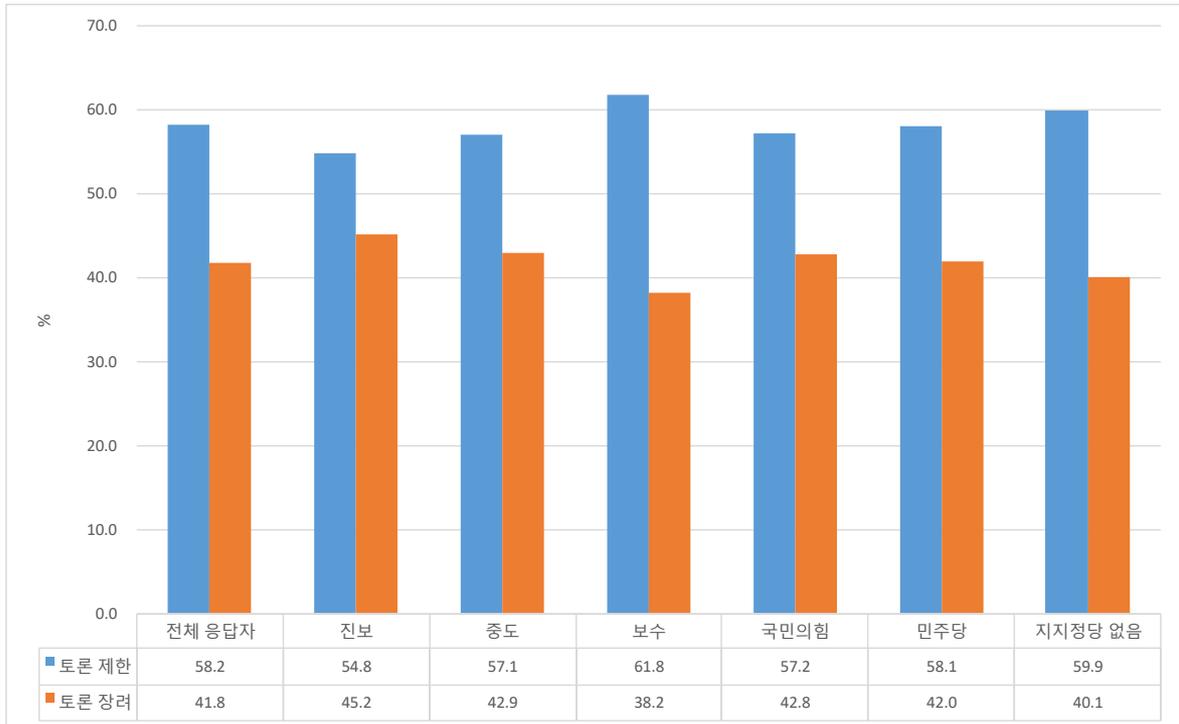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71%가 속의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반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
- 한국의 속의 과정에서 반론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만은 이념별, 지지 정당별로 나누어 교차 분석해 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즉,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발견됨.

<표 VII-1> 속의 과정에서의 반론 인정: 전체 응답자

속의 과정에서의 반론 인정	백분율
반론이 허용되지 않거나 반론을 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4.9
반론은 적어도 일부 당사자에게는 허용되지만 거의 항상 무시된다.	24.5
반론을 인정하지만 반론이나 반론을 제안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반론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41.6
반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반론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16.6
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반론을 대부분 거부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10.6
거의 항상 반론을 인정하며 종종 반론을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1.9
합계	100.0

- 위 표에서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반론을 인정하지만 반론이나 반론을 제안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반론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임.
- 이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더라도 여전히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반영함.

<그림 Ⅶ-2> 대중의 공론장 참여



■ 조사 문항

- “중요한 정책 변경이 고려되고 있을 때, 대중적 토론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독립적입니까?”
 - 1=대중적 토론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2=일부 제한적인 대중적 토론이 허용되지만 엘리트층 이하의 대중은 주요 정책 토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3=대중적 토론이 억압되지는 않지만 드물고, 대체로 엘리트들이 비엘리트 행위자들을 통제하거나 제약한다; 4=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일부 자율적인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지만, 이슈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한 소수의 전문 그룹에 국한되어 있다; 5=대중적 토론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비교적 광범위한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며 이슈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6=다수의 비엘리트 그룹과 일반인이 미디어, 협회 또는 동네, 거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풀뿌리 토론이 일반적이며 대중적 토론에 제약이 없다.
 - 1, 2, 3을 합산하여 “토론 제한”으로, 4, 5, 6을 합산하여 “토론 장려”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제한된 대중의 공론장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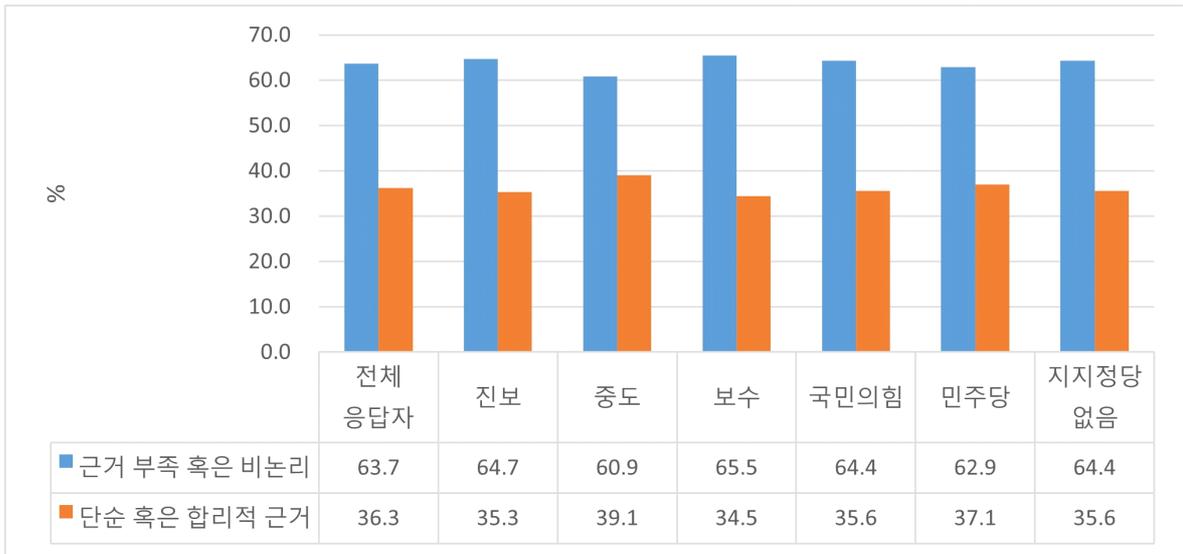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58.2%가 한국의 공론장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하다고 답함.
- 이러한 인식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이념 혹은 정당별 교차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음.
- 정책에 대한 대중적 토론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 중 41.8%에 그침.
- 집권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57.2%가 토론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가 제한된다고 답함.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의 중요한 공론장 참여의 통로는 정당임.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와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중의 공론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인식의 차이가 없음.
- 이는 한국 정당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임.

<표 VII-2> 대중의 공론장 참여: 전체 응답자

속의 과정에서의 반론 인정	백분율
대중적 토론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4.4
일부 제한적인 대중적 토론이 허용되지만 엘리트층 이하의 대중은 주요 정책 토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24.7
대중적 토론이 억압되지는 않지만 드물고, 대체로 엘리트들이 비엘리트 행위자들을 통제하거나 제약한다.	29.1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일부 자율적인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지만, 이슈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수의 전문 그룹에 국한되어 있다.	25.3
대중적 토론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비교적 광범위한 비엘리트 그룹이 참여하며 이슈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13.4
다수의 비엘리트 그룹과 일반인이 미디어, 협회 또는 동네, 거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풀뿌리 토론이 일반적이며 대중적 토론에 제약이 없다.	3.1
합계	100.0

- 응답자의 29.1%가 대중의 공론장 참여가 엘리트들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약된다고 답변.
- 이는 공론장을 주도하는 엘리트 지식인들과 대중 간의 소통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Ⅶ-3> 속의 과정에서의 근거 제시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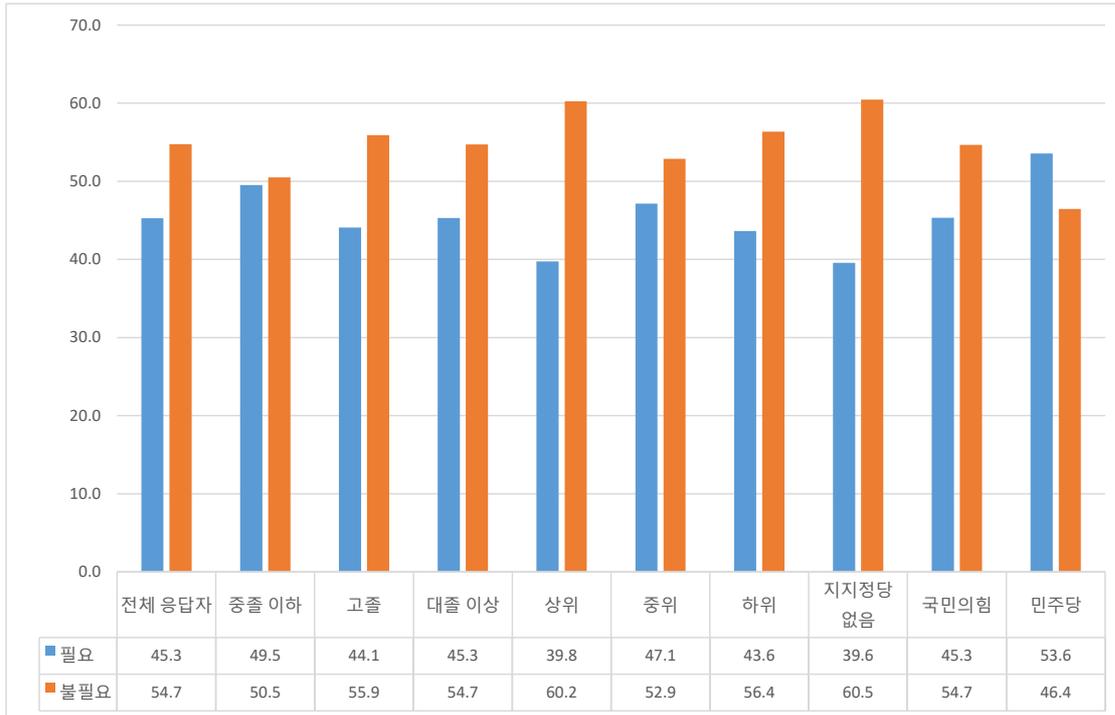
-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대체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2=주장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거짓 근거를 대는 경향이 있다; 3=주장에 대한 단순한 근거를 제시한다; 4=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검증된 근거를 제시한다.
 - 1과 2를 합산하여 “근거 부족 혹은 비논리”로, 3과 4를 합산하여 “단순 혹은 합리적 근거”로 위 그래프에 표시함.

■ 속의 과정의 질적 문제

- 공론장에서의 토론은 참여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토론 과정의 합리성으로 측정되는 토론의 질 또한 중요함.
- 전체 응답자의 63.7%가 토론에서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된 근거들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함.
- 정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도 이념 응답자들은 보수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이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
 - 이는 자신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진보와 보수 응답자들이 반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일 수 있음.

VIII. 개헌에 대한 태도와 선호

<그림 Ⅷ-1>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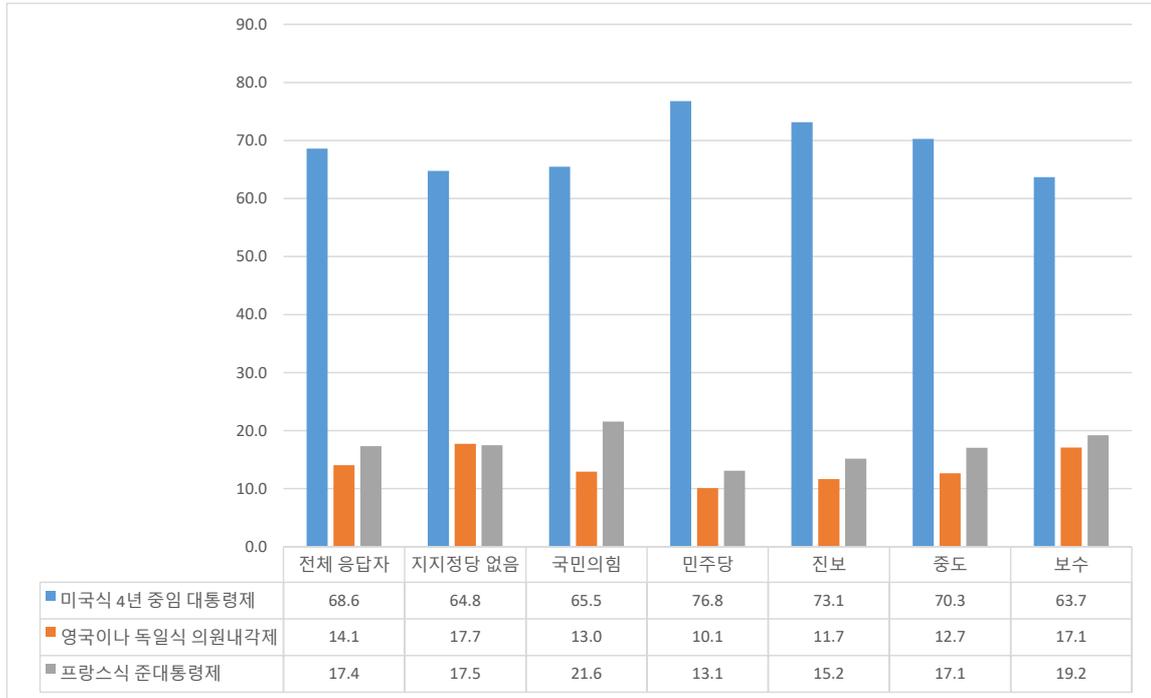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께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대체로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1과 2를 합산하여 “불필요”로, 3과 4를 합산하여 “필요”로 위 그래프에 표기함.

■ 개헌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과반이지만 필요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음.

- 전체적으로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과반(54.7%)이나 필요하다는 비율(45.3%)도 낮지 않음.
- 소득, 교육 수준,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보임.
- 다른 집단과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과반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Ⅷ-2>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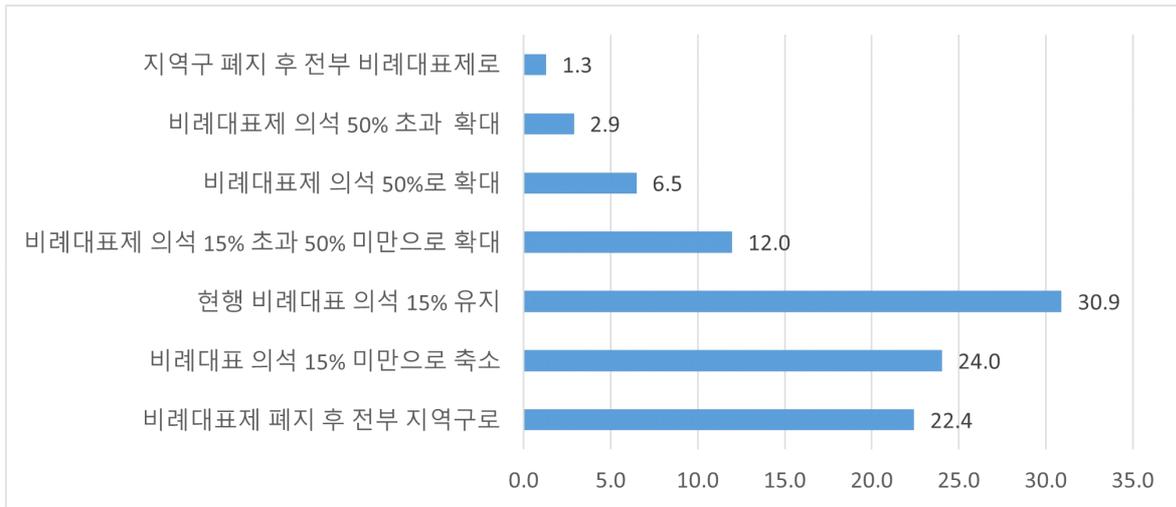
■ 조사 문항

-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4+4년으로 선거를 통해 연임이 가능해지는 제도); 2=영국이나 독일식 의원내각제(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가지며, 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 3=프랑스식 준대통령제(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제도)

■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높은 선호

-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대체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68.6%).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76.8%), 진보층(73.1%)의 미국식 대통령제 지지 선호가 두드러짐.
- 대통령제(미국식 또는 프랑스식)를 지지하는 경우 현행 상대 다수제 선호(82.5%)가 결선투표제(17.5%)보다 월등히 높음.
- 의원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Ⅷ-3>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호



■ 조사 문항

- “다음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은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그리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지역구 투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254석(84.7%), 비례대표 의석이 46석(15.3%)입니다.”
 - ①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선출; ②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줄어드는 방식으로 선출(비례대표 의석 15% 미만); ③ 현재 방식 유지(비례대표 의석 15%); ④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선출(15% 초과 ~ 50% 미만); 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절반 정도 되도록 선출(50%); ⑥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많도록 선출(50% 초과); ⑦ 지역구 선출 방식 폐지하고 전부 비례대표제로 선출

■ 현행 선거 제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유지 선호가 가장 높음

- 현행 선거 제도의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제일 높음(30.9%).
-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가 비례대표 증원 또는 지역구 선출 폐지 선호보다 월등히 높음.
 - 이는 비례대표 증원 선호가 높은 전문가 조사 결과와 뚜렷하게 대비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비매품/무료
95300



9 791199 135291

ISBN 979-11-991352-9-1 (PDF)